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포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책임연구원 김형주

공동연구원 임지연 유설희



연구보고 18-R06-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책임연구원_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유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위원)

연구보조원_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취업과 경제생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교육, 가치관, 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적 증거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제언하는 것이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2017년 7월에 국가승인통계(제402004호)로 지정되어 국가통계로서 청년의 일과 삶에 대한 지표가 공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초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에 시행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모집단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15세~39세의 국민이고, 표본규모는 만15~39세의 청년층 2,700명을 목표 표본수로 하였다. 표본 추출 틀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를 활용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금년도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목적인 연차별 실태조사를 하는 것과 더불어 전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안이 되는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심층분석하는 소연구들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첫째, 청년세대의 행복 결정요인 분석, 둘째,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셋째,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라는 세가지 소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연구보고 18-R06-1

I. 청년 세대 행복 결정요인 분석

1. 서론	3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
3. 분석 방법 및 결과	7
4. 결론	20

II.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 청년 핵심정책 대상 논의	25
2. 이론적 배경	27
3. 분석 방법	31
4. 분석 결과	37
5. 결론	49

III.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1. 서론	55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59

3. 실증조사분석	80
4. 결론	112
참고문헌	119

표 목차

표 I-1 변수의 구성	8
표 I-2 대학 재학생, 신규 졸업자, 기졸업자 간 특성 비교	10
표 I-3 청년들의 행복 결정요인(전체)	12
표 I-4 청년들의 행복요건 충족도 결정요인(전체)	14
표 I-5 청년들의 행복 결정요인(재학생, 신규 졸업자, 기졸업자)	15
표 I-6 청년들의 행복요건 충족도 결정요인(재학생, 신규 졸업자, 기졸업자)	18
표 I-7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19
표 II-1 한국인의 삶의 질(Korean quality of life) 지표 구성	29
표 II-2 분석 대상	32
표 II-3 청년 삶의 질 지표 정의 및 측정방법	34
표 II-4 다중격차 집단의 영역별 식별 기준	35
표 II-5 다중격차 위험 요인 분석 모형	37
표 II-6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38
표 II-7 19~29세 청년의 삶의 질(1988~1998년 생)	39
표 II-8 19~29세 청년의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삶의 질 (1988~1998년 생)	41
표 II-9 대학, 대학원 재학생의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삶의 질	42
표 II-10 정규학교 졸업생의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삶의 질	43
표 II-11 삶의 질 격차의 구성 요소 및 다중격차 분포	44
표 II-12 인구학적 특성별 다중격차 집단 분포(전체 청년)	45
표 II-13 다중격차 집단의 영역별 분포(중복응답)	47
표 II-14 다중격차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8
표 III-1 거버넌스의 주요 특징들	60
표 III-2 변수의 목록	93
표 III-3 요인분석 분석 결과	94
표 III-4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98

표 III-5 변수 간 상관관계	99
표 III-6 성별에 따른 참여수준 평균 비교 및 검정	101
표 III-7 연령에 따른 참여수준 평균 비교 및 검정	101
표 III-8 지역별에 따른 참여수준 평균 비교 및 검정	102
표 III-9 종사상 지위(임금vs비임금)에 따른 참여수준 평균 비교 및 검정	103
표 III-10 종사상 지위(정규직vs비정규직)에 따른 참여수준 평균 비교 및 검정	103
표 III-11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회귀모델	104
표 III-12 연령별에 따른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회귀 분석	106
표 III-13 집단 간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회귀 분석 비교(임금vs비임금)	109
표 III-14 집단 간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회귀 분석 비교(정규직vs비정규직)	111

그림 목차

그림 Ⅱ-1 다중격차 집단의 영역별 삶의 질 분포	46
그림 Ⅲ-1 연구 모형	96

○ — 제1장 청년 세대 행복 결정요인 분석

— 대학 졸업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3. 분석방법 및 결과
- 4. 결론



청년 세대 행복 결정요인 분석

-대학 졸업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¹⁾

1. 서론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연애, 결혼, 출산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청년 세대와 관련한 문제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대부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적 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어 온 실정이다(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한승헌, 임다혜, 강민아, 2017). 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과 불행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청년 세대의 가치관, 건강, 사회적 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년의 행복에 관해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실태와 더불어 어떠한 요인들이 청년의 행복수준을 높이는지 이해하는 것은 청년의 삶 전반을 이해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행복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행복에 관한 연구들은 행복을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웰빙 수준’, ‘심리적 안녕’, ‘생활만족도’ 등으로 정의하며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행복수준의 집단별 차이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 왔다. 국제적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의 행복수준은 경제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1) 이 장은 손연정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 다방면의 노력이 촉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도 최근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세대의 행복과 관련된 국내의 실증적 연구는 청소년층, 장년층, 노년층 등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는 청년 세대가 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장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작아 정치적으로 주요한 대상이 되기 어렵고, 부양가족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장년층에 비해 덜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민정, 조공호, 2009). 세대 간의 비교를 통해 청년 세대를 들여다 본 연구는 있으나, 청년 세대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청년 세대에 관한 연구들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다소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이명숙, 2015), 청년 세대 내의 차이를 포착하지 못하여 청년 내 집단 별로 특화된 정책설계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한승현 외, 2017).

이에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대학생과 대학 졸업 후 1~2년이 경과한 20대 청년으로 한정하여 한국의 청년 세대가 느끼는 행복감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청년 세대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대는 청소년기는 벗어났으나 아직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시기로, 사회적 독립의 기초가 되는 직업 및 배우자선택 등에 관한 중대한 결정에 직면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인생의 어느 시점보다 커지는 때이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대학생, 대학 신규 졸업자, 대학 졸업 후 1~2년이 경과한 기졸업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단계, 진입하는 단계, 적응하는 단계에서 청년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어떻게 바뀌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청년 세대에 대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행복에 관한 정의 및 측정방법에 관해 다른 연구들이 많은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행복의 척도는 Diener(1984)가 제시한 ‘주관적 안녕감’ 척도이다. 주관적 안녕감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으로써 삶의 만족이 높고 긍정 정서를 많이 느끼며 부정 정서는 적게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심리학에서 개인의 행복수준과 이를 결정짓는 심리적 기제를 설명한 이론으로는 Rapkin과 Schwartz(2004)의 ‘반응전환 이론(Response Shift Theory)’이 대표적이다(이명숙, 2015: 181에서 재인용). 반응전환이란 개인이 자신의 건강 또는 웰빙과 관련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적응 기제로 삶의 질에 관한 가치관과 관련 내적 준거가 변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삶의 질 지각에 영향을 주는 각종 생활사건 등(평가촉매)이 사회 비교 및 인생목표 재조정 등의 정서적 과정(평가기제)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한 내적 준거와 가치관 변화 및 개념화(반응전환)로 이루어진다. 이 뿐만 아니라, 평가촉매와 평가기제에 영향을 주는 개인, 문화, 환경 등에 관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선행조건)이 존재하며, 이러한 평가촉매, 평가기제, 반응전환, 선행조건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이 지각되고 평가되는 것이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초기의 연구들은 경제적인 측면을 특히 강조하였으나, 점차 성별, 연령, 교육, 결혼, 건강, 주거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우문식, 2012; Ryff & Heidrich, 1997). 한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정서요인도 행복과 관련한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Smith(1961) 및 Costa와 McCrae(1980)는 행복한 사람은 기질적으로 긍정적인 사고, 정서적 안정, 자아개념 등을 가지고 있어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한 경험이 많은 것이 아니라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행복을

느낀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행복과 관련한 외적 요인 및 개인의 성향, 기질과 함께 개인의 동기와 의지에 따라 선택한 자발적 활동인 의지적 활동(Intentional Activity)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촛불세대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20대 청년 세대에 있어 정치적 효능감은 이러한 의지적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청년 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른 연령집단과 다르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한국 청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직무만족, 건강, 대인 신뢰, 주변 안전과 같은 변인들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서봉언, 김정식, 2016), 개인적·사회 관계적 요인들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이명숙, 2015). 아울러 청년들의 불안한 경제 상태와 행복수준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이선희, 정복례, 김순희, 2015), 청년들의 학자금과 취업준비로 인한 교육비 및 주거비 등의 부채도 이들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이종아, 한창근, 2015).

본 연구는 청년 세대 중에서도 환경적, 정서적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시기인 20대 초중반의 대학생과 대학 신규 졸업자, 대학 졸업 후 1~2년이 경과한 청년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각각의 하위집단들의 행복 결정요인과 그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 시기 청년들은 학업문제, 대인관계 문제, 취업문제 등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며, 사회적응, 결혼,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 다양한 변화와 중요한 생애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행복과 관련한 객관적인 요인들은 물론 개인의 가치관 등 정서요인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행복과 관련한 변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개인의 가치관 등의 주관

적 요인들을 포괄하고, 동시에 사회관계적 특성 및 정치효능감과 같은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 세대의 행복수준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 세대의 하위집단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각 집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3. 분석방법 및 결과

1) 데이터 특성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총 2,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 7가지 영역에 대한 다양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학력이 2~3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졸업 시기 전후 청년들의 행복수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표본을 대학 재학생, 신규 졸업자, 기졸업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다. 신규 졸업자는 2017년 또는 2016년에 졸업한 청년으로 정의하고, 기졸업자는 졸업 후 1~2년이 경과된 2015년 또는 2014년 졸업자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각각의 유형에 포함되는 샘플은 재학생 550명, 신규 졸업자 125명, 기졸업자 136명 등, 총 81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변수 설정 방법은 <표 I-1>과 같다. 종속변수는 행복 수준과 관련된 항목들로, 주관적 웰빙수준 및 행복을 위한 요건 만족정도를 측정한다. 주관적 웰빙수준은 5가지 질문들로 구성되며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차 있다’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들에 대한 응답 결과를 합산해 4개 분위로 나누어 75% 이상에 속할 경우 주관적 웰빙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다른 종속변수로는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를 나타내는 5점 척도의 항목을 이용하여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더미 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1-1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단위	변수 설정	
종속 변수	행복도(주관적 웰빙수준)	더미	주관적 건강수준에 관한 5개 항목의 응답 결과를 합산해 상위 25% 이상인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행복을 위한 요건 만족도	더미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1-5점). 4점이상=1, 4점미만=0	
독립 변수	인구 경제적 특성	연령	세	만 연령
		성별	더미	남자=1, 여자=0
		결혼 여부	더미	유배우자=1, 미혼 또는 사별·이혼=0
		부모 경제적 수준	점	최하(1점)부터 최상(10점)까지 10점 척도
		부모와 동거여부	더미	동거=1, 비동거/독립=0
		지난주 근로여부	더미	일을 하였음=1, 일을 하지 않았음=0
		소득	만원	월평균 소득
	선택하는 가치	채무 여부	더미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 있음=1,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 없음=0
		일 vs 여가	점	여가를 일보다 더 선호하는 정도(1-7점)
		현실 vs 이상	점	이상을 현실보다 더 선호하는 정도(1-7점)
		결과 vs 과정	점	과정을 결과보다 더 선호하는 정도(1-7점)
		개인 vs 집단	점	집단을 개인보다 더 선호하는 정도(1-7점)
	건강	규칙적인 운동 여부	더미	예=1, 아니오=0
		외모중요도 인식	더미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5점). 4점이상=1, 4점미만=0
	관계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더미	지난주 점심기준 혼자 밥 먹은 경험 있다=1, 없다=0
		혼자 술을 먹은 경험	더미	지난주 저녁기준 혼자 술 마신 경험 있다=1, 없다=0

구분	변수	단위	변수 설정
정치적 효능감	정치 문제 이해 및 참여	더미	정치적 문제 이해 및 참여 능력(1-5점) 4점이상=1, 4점미만=0
	포용능력	더미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이해할 수 있음(1-5점). 4점이상=1, 4점미만=0
	정치발전 영향력	더미	선거나 캠페인 참여를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 미 칠 수 있음(1-5점). 4점이상=1, 4점미만=0

* 자료: 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독립변수로는 연령, 성별, 결혼 여부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 및 부모의 경제적 수준, 부모와 동거여부, 지난주 근로여부, 월평균 소득, 채무 여부(학자금 대출 포함) 등 경제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가치관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였는데, 여가, 이상, 과정, 집단을 각각 일, 현실, 결과, 개인에 비해 얼마나 더 선호하는지를 묻는 1~7점 척도의 문항을 가치관에 대한 척도로 이용하였다. 이밖에도 규칙적인 운동 여부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였으며, 사회적 관계와 참여를 나타내주는 항목으로 지난주 점심기준 혼자 밥 먹은 경험과 지난주 저녁기준 혼자 술 마신 경험, 그리고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3가지 항목을 포함하였다. 정치적 효능감은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 더미 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1-2〉에는 본 연구의 분석 표본의 특성이 대학 재학생, 대학 신규 졸업자, 대학 기졸업자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다. 전체 811명의 분석 표본 중에서 재학생이 55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졸업자가 136명, 신규 졸업자가 125명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수준은 재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규 졸업자, 기졸업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복을 위한 요건 만족도의 경우

재학생과 신규 졸업자의 경우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졸업자는 두 집단보다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표 1 -2 대학 재학생, 신규 졸업자, 기졸업자 간 특성 비교

구분		변수	전체 (N=811)	재학생 (N=550)	신규 졸업자 (N=125)	기졸업자 (N=136)
종 속 변 수	행복 수준	행복도(주관적 웰빙수준)	0.33	0.35	0.29	0.26
		행복을 위한 요건 충족도	0.37	0.38	0.38	0.34
독 립 변 수	인구 경제적 특성	만 연령	23.67	22.67	25.14	26.37
		성별	0.42	0.40	0.42	0.50
		결혼 여부	0.11	0.09	0.10	0.18
		부모 경제적 수준	5.59	5.63	5.73	5.30
		부모와 동거여부	1.29	1.27	1.34	1.33
		지난주 근로여부	0.56	0.46	0.71	0.83
		월평균 소득	98.98	67.35	143.88	185.60
	선호 하는 가치	채무 여부	0.19	0.16	0.27	0.26
		일 vs 여가	4.23	4.27	4.17	4.16
		현실 vs 이상	2.96	2.97	3.08	2.80
		결과 vs 과정	3.36	3.35	3.61	3.15
		개인 vs 집단	3.74	3.80	3.90	3.36
	건강	규칙적인 운동 여부	0.44	0.47	0.41	0.35
		외모중요도 인식	3.90	3.91	3.86	3.93
	관계	혼자 밥을 먹은 경험	0.54	0.57	0.51	0.42
		혼자 술을 먹은 경험	0.15	0.14	0.18	0.15
	정치적 효능감	정치문제 이해 및 참여	0.41	0.39	0.51	0.43
		포용능력	0.51	0.48	0.62	0.52
		정치발전 영향력	0.40	0.41	0.44	0.33

* 자료: 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예상대로 대부분 신규 졸업자와 기졸업자가 재학생에 비해 큰 경향을 보였다. 반면, 규칙적 운동 여부 및 혼자 밥을 먹은 경험은 재학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가치와 정치적 효능감 변수의 경우 신규 졸업자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이상, 과정, 집단을 각각 일, 현실, 결과, 개인에 비해 선호하는 정도가 높고, 정치적 효능감과 관련한 세 가지 항목 모두 신규 졸업자가 긍정적인 응답률이 재학생과 기졸업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청년 세대의 대학졸업 상태에 따라 개인의 인구경제적 특성, 선호가치, 건강, 관계 및 참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text{Prob}(Value = 1) = \Phi\left(\beta_0 + \sum_j \gamma_j X_j\right)$$

위 식에서 Value는 주관적 웰빙수준이 높은 경우(또는 행복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이다. X는 설명변수의 벡터이며, 인구경제적 특성, 선호가치, 건강, 관계 및 참여 등의 변수를 포함한다. 프로빗 모형은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 $\left(\Phi\left(\beta_0 + \sum_j \gamma_j X_j\right)\right)$ 에 최우추정법을 적용하여 각 요인의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값을 추정한다. 또한, 추정계수의 한계 효과 $\left(\frac{\partial \text{Prob}(Value = 1|X)}{\partial X_j}\right)$ 를 추정하면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 -3 청년들의 행복 결정요인(전체)

변수	행복도	
	계수	한계 효과
만 연령	-0.0298**	-0.0102
성별(여성=1)	0.1546	0.0528
결혼 여부	0.2487	0.0850
부모 경제적 수준	0.0379	0.0130
부모와 동거여부	-0.0559	-0.0191
지난주 근로여부	0.0485	0.0166
월평균 소득	0.0008	0.0003
채무 여부	-0.4980***	-0.1702
일 vs 여가	0.0292	0.0100
현실 vs 이상	0.0550	0.0188
결과 vs 과정	-0.0127	-0.0043
개인 vs 집단	0.1222***	0.0418
규칙적인 운동 여부	0.2270**	0.0776
외모에 대한 중요도	-0.0349	-0.0119
혼자 밥을 먹은 경험	0.0221	0.0075
혼자 술을 마신 경험	-0.0006	-0.0002
정치문제 이해 및 참여	-0.0797	-0.0272
포용능력	-0.0512	-0.0175
정치발전 영향력	0.0697	0.0238
상수	-0.6549	
χ^2		50.95
Obs		811

* 자료: 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 주: ** $p < .01$., *** $p < .001$.

먼저, 대학 재학생, 신규 졸업자, 기졸업자 모두를 포함한 전체 분석표본의 행복 결정 요인에 대한 프로빗 모형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행복도는 주관적 웰빙수준이 상위 25% 이내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표 I-3>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 채무 여부, 개인보다 집단에 대한 선호, 규칙적인 운동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한계 효과를 보면,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1%

가까이 낮아졌다. 또한, 학자금 대출 등 채무가 있는 경우 행복 확률이 17% 감소하였으며,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하여서는 개인보다 집단을 더 선호할 경우 행복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운동도 청년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추정계수의 한계 효과를 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관적 웰빙수준이 상위 25%에 속할 확률이 7.8%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4〉는 행복을 위한 요건 충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전체 분석표본에 대해 프로빗 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종속변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요건에 대한 충족감이 낮아지고 결혼은 행복요건 충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 한계 효과를 보면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행복요건 충족감을 느낄 확률이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요건 충족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특성 중 월평균 소득은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채무 여부는 행복 요건 충족감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가치와 관련한 변수 중에는 여가를 일보다 선호할수록, 집단을 개인보다 선호할수록 행복요건을 충족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규칙적인 운동은 행복도와 마찬가지로 행복요건 충족도 또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한계 효과는 0.0989로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경우 행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9.9%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변수 중에서는 지난주 기준으로 혼자 밥을 먹은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행복 요건 충족도가 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3〉과 〈표 1-4〉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연령, 채무 여부, 개인에 비해 집단에 대한 선호도, 규칙적인 운동 여부가 행복도와 행복요건 충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혼, 부모의 경제적 수준, 본인의 소득 등의 객관적 요인들은 행복수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청년의 행복요건 충족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대 청년들이 행복에 필요한 조건으로 결혼과 경제적 조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1-4 청년들의 행복요건 충족도 결정요인(전체)

변수	행복도	
	계수	한계 효과
만 연령	-0.0431***	-0.0149
성별(여성=1)	0.1387	0.0478
결혼 여부	0.6137***	0.2116
부모 경제적 수준	0.1329***	0.0458
부모와 동거여부	0.0237	0.0082
지난주 근로여부	-0.1070	-0.0369
월평균 소득	0.0015***	0.0005
채무 여부	-0.3329**	-0.1148
일 vs 여가	0.0824**	0.0284
현실 vs 이상	0.0386	0.0133
결과 vs 과정	0.0132	0.0045
개인 vs 집단	0.0674*	0.0232
규칙적인 운동 여부	0.2869***	0.0989
외모에 대한 중요도	-0.0992	-0.0342
혼자 밥을 먹은 경험	-0.1665*	-0.0574
혼자 술을 마신 경험	-0.0585	-0.0202
정치문제 이해 및 참여	0.1752	0.0604
포용능력	0.0779	0.0269
정치발전 영향력	-0.0803	-0.0277
상수	-0.7393	
χ^2	84.25	
Obs	811	

* 자료: 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1-5 청년들의 행복 결정요인(재학생, 신규 졸업자, 기졸업자)

변수	재학생		신규 졸업자		기졸업자	
	계수	한계 효과	계수	한계 효과	계수	한계 효과
만 연령	-0.0312*	-0.0110	-0.0996*	-0.0279	0.0646	0.0176
성별(여성=1)	0.2302*	0.0810	-0.0484	-0.0135	0.0982	0.0268
결혼 여부	0.3861	0.1359	-0.1003	-0.0280	0.0100	0.0027
부모 경제적 수준	0.0397	0.0140	0.1305	0.0365	0.0025	0.0007
부모와 동거여부	-0.1226	-0.0432	0.6184**	0.1729	-0.5379	-0.1470
지난주 근로여부	-0.0612	-0.0216	0.6204	0.1734	0.0590	0.0161
월평균 소득	0.0011	0.0004	0.0006	0.0002	0.0009	0.0002
채무 여부	-0.5346***	-0.1882	-0.1882	-0.0526	-0.7069**	-0.1932
일 vs 여가	0.0454	0.0160	-0.0983	-0.0275	0.0067	0.0018
현실 vs 이상	0.0472	0.0166	0.0129	0.0036	0.2688**	0.0735
결과 vs 과정	-0.0635	-0.0223	0.1382	0.0386	-0.0107	-0.0029
개인 vs 집단	0.1162***	0.0409	0.0133	0.0037	0.2069**	0.0565
규칙적인 운동 여부	0.2672**	0.0941	0.0694	0.0194	0.3038	0.0830
외모에 대한 중요도	-0.0615	-0.0216	0.0370	0.0103	-0.1436	-0.0392
혼자 밥을 먹은 경험	0.0163	0.0057	0.3158	0.0883	0.0090	0.0025
혼자 술을 마신 경험	0.0041	0.0015	-0.4104	-0.1147	0.3668	0.1002
정치문제 이해 및 참여	0.0868	0.0305	-0.5988**	-0.1674	-0.0782	-0.0214
포용능력	0.0045	0.0016	-0.2377	-0.0664	-0.4018	-0.1098
정치발전 영향력	-0.0354	-0.0125	0.4543	0.1270	0.0219	0.0060
상수	-0.3324		-0.4228		-2.6636	
χ^2	34.02		26.50		22.88	
Obs	550		125		136	

* 자료: 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 주: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표 1-5>와 <표 1-6>은 청년 세대 하위집단으로 재학생, 신규 졸업자, 기졸업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프로빗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재학생 집단에서는 연령, 성별, 채무 여부, 개인보다 집단을 더 선호하는 정도, 규칙적인 운동 여부가 행복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연령과 채무 여부는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 중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거나

학자금 대출과 같은 채무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주관적인 웰빙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단을 개인보다 선호하는 정도 및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대학생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졸업자 집단에 있어서도 연령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한계 효과는 재학생 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관적 웰빙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치적 효능감과 관련하여 신규 졸업자 집단에서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행복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효능감이 행복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 배치되는 결과로, 역 인과관계 문제 등의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졸업한 시점으로부터 1~2년이 경과된 기졸업자 집단에서는 채무 여부와 현실 보다 이상을 선호하는 정도 및 개인보다 집단을 선호하는 정도가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재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채무는 청년 세대의 행복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재학생과 신규 졸업자에 비해 기졸업자의 경우 가치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일보다 여가를 선호하는 경우, 개인보다 집단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6〉은 청년들의 행복요건 충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청년 세대의 하위집단인 재학생, 신규 졸업자, 기졸업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세 집단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서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어떠한 요인도 세 집단 모두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졸업 여부와 졸업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청년 세대의 하위집단이 매우 이질적이며, 이들이 자신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들이

충족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로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된다.

각 집단별로 행복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학생의 경우 인구경제적 특성으로 연령과 채무여부가 행복요건 충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혼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행복요건을 충족한다고 느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가치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가를 일보다 선호하거나 집단을 개인 보다 선호하는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행복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학생의 경우 다른 집단과 달리 외모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혼자 밥을 먹는 경험이 행복요건 충족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규 졸업자 집단의 경우, 규칙적인 운동은 행복 요건을 충족한다고 응답할 확률을 30%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특성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졸업자 집단에서는 부모와 동거여부 및 월평균 소득이 행복 요건 충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각각의 한계 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행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19%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소득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월평균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 행복요건이 충족되고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학생 집단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경험이 행복요건 충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과 유사하게 기졸업자의 경우 혼자 술을 마신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정 계수의 한계 효과를 보면 지난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행복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기졸업자는 재학생과 신규 졸업자에 비해 경제적인 요인들이 행복요건 충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며, 재학생은 연령, 결혼, 가치관과 외모에 대한 중요성 등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표 1-6 청년들의 행복요건 충족도 결정요인(재학생, 신규 졸업자, 기졸업자)

변수	재학생		신규 졸업자		기졸업자	
	계수	한계 효과	계수	한계 효과	계수	한계 효과
만 연령	-0.0456**	-0.0155	-0.0516	-0.0163	-0.0154	-0.0046
성별(여성=1)	0.1926	0.0656	0.0587	0.0185	0.1010	0.0299
결혼 여부	0.7030***	0.2394	0.0504	0.0159	0.4432	0.1313
부모 경제적 수준	0.1577***	0.0537	0.0693	0.0219	0.0510	0.0151
부모와 동거여부	-0.0584	-0.0199	0.2464	0.0777	0.6423*	0.1903
지난주 근로여부	-0.0488	-0.0166	0.2511	0.0792	0.1131	0.0335
월평균 소득	0.0011	0.0004	0.0009	0.0003	0.0043**	0.0013
채무 여부	-0.4155**	-0.1415	-0.4194	-0.1322	-0.0603	-0.0179
일 vs 여가	0.1017**	0.0346	-0.0157	-0.0049	0.0494	0.0146
현실 vs 이상	0.0667	0.0227	0.0858	0.0271	-0.1062	-0.0315
결과 vs 과정	-0.0292	-0.0099	0.0431	0.0136	0.0724	0.0215
개인 vs 집단	0.1261***	0.0429	-0.0461	-0.0145	-0.0105	-0.0031
규칙적인 운동 여부	0.1227	0.0418	0.9575***	0.3019	0.3233	0.0958
외모에 대한 중요도	-0.1350*	-0.0460	-0.0192	-0.0060	0.0888	0.0263
혼자 밥을 먹은 경험	-0.2171*	-0.0739	0.1868	0.0589	-0.1527	-0.0452
혼자 술을 마신 경험	-0.0806	-0.0275	-0.0272	-0.0086	-1.1808***	-0.3499
정치문제 이해 및 참여	0.2354	0.0802	-0.0132	-0.0042	-0.0637	-0.0189
포용능력	0.2125	0.0724	-0.4526	-0.1427	0.1274	0.0377
정치발전 영향력	-0.1468	-0.0500	0.1595	0.0503	0.1703	0.0505
상수	-0.7907		-0.4042		-2.5889	
χ^2	69.18		26.54		36.83	
Obs	550		125		136	

* 자료: 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 주: * $p < .05$, ** $p < .01$, *** $p < .001$.

이상에서 청년 세대의 행복도와 행복을 위한 요건 충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대체로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입증된 영향요인들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청년 세대의 하위집단을 대학 졸업을 전후하여 세 집단으로 나누어 대학 재학, 졸업, 사회적응 단계에서 청년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를 위하여, <표 1-7>에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건을 10개 항목 중에 선택하게 한 결과, 20대 청년에게 있어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재산/경제력이 꼽혔으며, 그 다음으로 화목한 가정, 건강, 자아성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7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구 분	재산/ 경제력	화목한 가정	건강	자아 성취	감사/ 긍정적 태도	종교 생활	직업/ 직장	연인 (이성관 계 등)	친구/ 대인 관계	꿈/ 목표 의식	기타
대학생	28.9	20.0	13.1	11.5	5.6	0.7	6.2	0.6	6.7	6.6	0.2
신규 졸업자	29.6	16.0	15.2	12.0	10.4	1.6	4.0	0.0	4.0	7.2	0.0
기졸업자	34.6	24.3	14.0	5.9	4.4	0.0	5.2	1.5	3.7	6.6	0.0
전체	30.0	20.1	13.6	10.6	6.2	0.7	5.7	0.6	5.8	6.7	0.1

* 자료: 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하지만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들에 대한 응답은 하위집단별로 상이하 게 나타났는데, 기졸업자의 경우 재학생 및 신규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경제력, 화목한 가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반면 자아성취를 행복 요건으로 선택한 비율은 5.9%로 대학생 및 신규 졸업자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신규 졸업자

의 경우 감사/긍정적 태도를 행복한 삶의 요건으로 선택한 비율이 10.4%로 재학생 및 기졸업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경우 신규 졸업자와 기졸업자에 비해 친구/대인관계를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표 1-6>의 분석 결과에서도 재학생의 경우 개인에 비해 집단을 선호하는 정도,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등 인간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행복 충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1-6>에서 기졸업자의 경우 경제적 특성이 중요한 행복 충족도 영향요인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도 <표 1-7>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대 한국 청년들의 행복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연령과 채무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관과 관련한 요인으로 개인보다 집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경우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과 관련하여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행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연령과 채무여부는 행복요건 충족도를 낮추고, 결혼 및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행복요건 충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과 관련한 요인들은 여가를 일보다 선호하는 정도, 집단을 개인보다 선호하는 정도가 높을 경우 행복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칙적인 운동은 행복뿐만 아니라 행복요건 충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혼자 밥을 먹은 경험은 행복요건 충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청년 세대를 대학생, 신규 졸업자, 졸업 후 1~2년이 경과한 기졸업자의 세 가지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행복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하위집단별 영향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행복도의 경우 기졸업자 집단에서 재학생 및 신규 졸업자에 비해 가치관과 같은 주관적 요인이 인구경제학적 특성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반대로 행복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기졸업자 집단에서 경제적 요인의 중요도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와 도전을 경험하는 시기인 대학졸업을 전후한 20대 청년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청년 세대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년 세대의 하위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행복도와 행복 결정요인에 관한 그들의 이질성을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데이터 분석 방법에 있어 횡단면 자료 분석의 한계로서 관측되지 않는 개인의 이질적인 속성을 모두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추후 패널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보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제2장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 출생코호트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분석방법
- 4. 분석결과
- 5.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최근 청년의 삶의 질을 다중격차의 관점에서 확인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2018년 청년 실업률은 10.5%이며, 고용보조지표인 체감실업률은 22.9%에 달한다(통계청, 2018). 청년 실업문제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청년층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청년층에 관한 연구들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수행되어왔다. 다수의 연구들이 청년기의 핵심과업인 교육자격 획득과 노동시장 성과에 집중한다. 주로 청년층의 실업, 니트(NEET) 등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을 분석하거나(권혁진, 유호선, 2011; 김성남, 최수정, 2012; 김태완, 김문길, 정진욱, 강성호, 윤상용, 이주미 외, 2012; 남재량, 이철인, 전영준, 우석진, 2011; 박미희, 홍백의, 2014; 박성재, 반정호, 2012; 박진희, 김용현, 2010; 변금선, 2018; 신동준, 2013; 우해봉, 2012), 교육계층화 관점에서 대학진학, 고등교육의 질적 차별화를 분석한다(구인회, 2003; 김성식, 2008; 김경근, 2005; 김기현, 방하남, 2005; 김위정, 김양분, 2013; 문혜진, 변금선, 구인회, 2015; 방하남, 김기현, 2003; 이승은, 김태중,

2) 이 장은 변금선 선임연구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집필하였음

2012; 장상수, 2000). 이들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요인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생애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청년층이 목도하는 비경제적 영역의 어려움과 청년층의 내적 격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던 최근 청년층(1988-1998년생)의 삶의 질, 특히 청년 삶의 질의 집단 내 격차와 그 안에 내포된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주목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의 주관적, 객관적 지표를 반영해 청년층의 삶의 질을 분석하였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인간의 삶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차원의 객관적, 주관적 지표를 통해 측정된다는 점에서 최근 청년층의 삶을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적절하다. 청년층의 삶의 질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관적 삶의 질 혹은 사회심리적 차원의 지표에 초점을 맞추거나 청년 미취업자 등 청년 일부에 관한 연구에 그친다(이나경, 2018; 한성민, 이숙중, 2018; 한승헌 외, 2017). 둘째, 본 연구는 청년층 삶의 질을 다중격차(multiple disparities)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존 청년 연구들은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생애과정 위험을 기반으로 청년층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 내에 존재하는 격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복수의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다중격차 집단을 식별하고 그들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재적 목적은 다중격차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청년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현재 드러나는 청년층의 어려움이 경기침체나 일자리 감소라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 청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집단인 청년은 그들이 속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청년연구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청년층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청년층 삶의 질에 있어서 내적 격차와 다중격차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셋째, 청년층의 삶의 질은 가족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삶의 질, 다중격차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이어서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청년층의 삶의 질 수준과 격차, 가족배경에 따른 삶의 질 차이, 다중격차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한계에 관해 논한다.

2. 이론적 배경

1) 청년의 정의

생애과정 관점에서 청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을 경험하는 성인이행기(adulthood)에 위치한다. 청년기에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생애과업은 정규교육의 종료, 취업, 부모로부터의 주거 및 경제적 독립, 자녀의 출산, 가족형성 등이다(Furstenberg, Rumbaut, & Settersten, 2005: 3).

청년의 정의는 이러한 생애과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육수준이 낮고 20대에 결혼과 출산, 독립을 하던 과거에 청년은 20대 초중반까지의 ‘젊은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초혼 연령이 30대로 늦어지고 교육수준 상향화로 인해 최종 교육을 마치는 연령이 20대 중후반으로 연장된 현재 청년은 30대 초반에서 후반으로도 연장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김수정, 2010; Furstenberg, et al., 2005).

본 연구에서 청년은 19~29세 연령집단이다. 통계청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17호)은 15~29세를 청년으로 정의한다(김기현, 2017).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에 해당되므로 연령하한을 19세로 설정하였다.

2) 삶의 질과 다중격차

(1)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의 질은 복지, 웰빙, 행복, 주관적 웰빙 등과 혼용되기도 하며, 연구자마다 매우 다양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통계청, 2017: 9). 관련해 통계청(2017)은 삶의 질의 개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삶의 질은 어떤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반영하고 있어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한 사회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과 구성원의 가치 및 규범에 의해 변화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또한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societal quality)’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요컨대, 삶의 질은 거시적 측면에서 전체 사회의 환경을 반영하며 동시에 미시적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수준과 차이를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다음 <표 II-1>은 한국인의 삶의 질 지표를 보여준다. 총 12개 영역에 대해 8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시/미시, 주관/객관적 측면의 지표를 총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OECD의 Better Life Index는 측정 차원을 물질적 삶의 조건과 삶의 질로 나뉘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물질적 삶의 조건에는 주거, 소득과 부, 직업과 소득이 포함되며 삶의 질에는 사회적 관계, 교육적 기술, 환경의 질, 건강상태, 주관적 안녕, 개인의 안전, 일과 삶의 조화가 포함된다(정해식, 김성아, 2015).

표 II-1 한국인의 삶의 질(Korean quality of life) 지표 구성

구분	객관적 지표(56)		주관적 지표(24)	
	+	-	+	-
소득, 소비, 자산	1인당 GNI 균등화중위소득 균등화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빈곤율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고용, 임금	고용률, 근로자 평균근로소득	실업률,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 비율	일자리만족도	
사회복지	공적연금가입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주거	1인당 주거면적, 통근통학 소요시간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등	주거환경 만족도	
건강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기대수명 등	고혈압유병률, 당뇨병유병률 등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교육	고등교육 이수율, 학생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PISA 백분위 순위, 대졸생취업률 등	학업중단율	학교생활만족도	
문화, 여가	평균여가시간,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문화여가 지출비율,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률		여가활용 만족도	시간부족 인식
가족, 공동체	한부모가구 비율, 독거노인비율,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 사회단체 참여율		가족관계 만족도 지역사회소속감	
시민 참여	투표율,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시민의식 등	
안전		강력범죄 발생률, 산업재해율 등	사회안전 평가 등	
환경	동시공원 면적, 하수도 보급률 등	미세먼지 농도	체감환경 만족도	기후변화 불안도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 출처: 통계청 (2017). 국민 삶의 질 2017.

2) 다중격차(multiple disparities)

본 연구는 삶의 질의 격차, 특히 다중격차에 주목한다. 다중격차는 집단 내 격차가 다차원적 영역에서 중복하여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정준호, 전병유, 2016; 황규성, 2016; Tilly, 1998). 다중격차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교차성, 다차원적 불평등이 있는데 다중격차는 두 개념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중격차의 핵심요소는 격차가 드러나는 영역의 다차원성, 그러한 다차원성이 겹쳐서 나타나는 중첩성이다. 첫째, 다중격차는 다차원적 불평등의 영역을 포괄한다. 다차원적 불평등은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소득을 넘어 교육, 의료, 주거, 환경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Sen(1980)에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백승주, 금현섭, 2013; 정해식, 김수완, 안상훈, 2014).

둘째, 다중격차는 불평등이 발견되는 다차원적 영역이 겹치는 중첩성을 갖는다. 다중격차의 개념적 논의를 정리한 황규성(2016)은 다중격차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다중격차는 단일 범주에서의 불평등이나 이 범주들이 단지 병렬적으로 함께 존재(coexistence)하는 것을 넘어 범주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립한다.” 고 지적하고, 다중격차가 범주 간 상호작용, 고유한 문법, 구조화, 재생산, 환원불가능성 등의 속성을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삶의 질의 격차를 다중격차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다중격차는 청년층의 삶의 현실과 구조적 환경을 드러내는데 매우 유용한 발견적(heuristic) 도구이며(황규성, 2016),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내적 격차의 존재양상을 확인하고 내적격차가 다차원적 영역에서 어떻게 고착화되는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지를 가족배경과 다중격차의 관계 분석을 통해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3. 분석방법

1) 분석자료

청년 삶의 질을 다차원적 영역에서 다루는 조사 자료는 고용정보원의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가 있다. 그러나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에는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다중격차의 재생산 특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가족배경 변수에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이하 청년실태조사)에서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생활을 비롯하여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결혼, 양육, 출산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청년 세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39세의 일반 국민이며, 표본 크기는 2,700명이다(김기헌, 이윤주, 유설희, 2017).

본 연구는 현재 만 19~29세 청년층인 1988년~1998년생 출생코호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 대학,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과 정규학교 졸업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1,133명이었으며 이들 중 재학생은 462명(40.8%), 졸업생은 671명(59.2%)이었다.

다음 <표Ⅱ-2>는 분석 대상을 요약한 것이다. 2017년 현재 19~24세인 1988~1993년생 595명 중 63.4%가 재학생이었으며, 졸업생은 217명(36.5%)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5년 1.1개월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18)³⁾. 현재 25~29세인 1994~1998년생 538명 중 84명(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부가조사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4년 2.7개월이며, 4년제 대학의 경우 평균 소요기간은 5년 1.1개월이다(통계청, 2018).

15.6%)이 재학생이었으며 454명(84.4%)이 졸업생이었다.

표 II-2 분석 대상

(단위: 명, %)

출생연도	만 나이	대학, 대학원생		졸업생		전체	
1988~1993	19~24세	378	(63.6)	217	(36.5)	595	(100.0)
1994~1998	25~29세	84	(15.6)	454	(84.4)	538	(100.0)
전체		462	(40.8)	671	(59.2)	1,133	(100.0)

2) 분석방법

(1) 청년 삶의 질 측정

본 연구는 삶의 질을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거시적 지표는 청년이 놓인 환경적 요인을 간략히 지표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청년 개인의 삶의 격차를 드러내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6개의 영역, 12개 지표로 측정하였다. <표 II-3>은 각 영역의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경제영역은 채무, 물질적 박탈, 부모로부터 독립으로 측정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한 것으로 보았으며,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금전적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물질적 박탈은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등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⁴⁾ 채무가 있는 경우와 물질적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삶의 질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20대 청년층의 생애과정 특성-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이 혼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른 독립은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 청년층에게서 관측되는 결혼과 독립의 연기를 고려할 때 20대 청년층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

둘째, 노동 영역은 취업여부, 고용안정성, 직장조건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전체와 졸업생은 취업여부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집단을 구별하였으며, 재학생의 경우 취업여부를 통해 재학 중 근로를 식별했다. 고용안정성, 직장조건 만족도는 졸업생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를 고용안정성이 높은 집단으로 구별하였다. 직장조건 만족도는 '직장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는지?'에 관한 주관적 만족도로 측정했다.

셋째, 교육 영역은 재학생의 경우 졸업을 유예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졸업생은 교육이수 연수로 측정했다. 청년실태조사는 재학, 수료, 중퇴 등을 구별하여 조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졸업을 6년, 중학교 졸업을 9년,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12년, 대학졸업인 경우 16년, 대학원 졸업을 18년으로 전환하였다.

넷째, 건강은 EU Youth Report가 사용한 주관적 정신건강 척도로 측정했다. 주관적 정신건강 척도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에 관해 0부터 5까지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최고점은 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음을 의미한다.

4) EU의 물질적 박탈 항목은 자동차 소유 유무를 포함하여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개 항목 이상에 해당될 경우 심각한 물질적 박탈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5).

EU는 총점을 4분위로 계산하였을 때 최하위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판단한다(European Commission, 2015).

표 II-3 청년 삶의 질 지표 정의 및 측정방법

지표		정의 및 측정
경제	채무여부	채무 있음=1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대출 포함)가 있는 경우)
	물질적 박탈 경험	물질적 박탈 경험이 있음=1 (주거비 지출, 식사를 거른 경우, 긴급지출, 여가 제한, 텔레비전, 냉장고, 휴대전화)
	독립여부	부모로부터 독립함=1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
노동	취업여부	취업=1, 미취업=0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고용안정성 (정규직 여부)	정규직=1 (정규직 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직장조건 만족도	5점 척도 (높을수록 만족도 높음)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는가? ①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②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받고 있는 편이다, ⑤충분히 받고 있다)
교육	(재학생) 졸업유예	졸업유예 경험 있음=1 (대학재학 중 졸업을 유예한 경험이 있는 경우)
	(졸업생) 교육연수	~년 (초졸 6년, 중졸 9년, 고졸 12년, 대졸 16년, 대학원졸 18년)
건강	정신건강	정신건강 낮음=1 (EU 주관적 정신건강 척도 총점 30점 주관적 정신건강 척도 하위 25% 인 경우)
사회관계	친구유무	친한 친구 있음=1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는 경우)
	외출정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지 않음=1 (보통 집에 있거나 자기 방에만 있는 경우)
행복	행복조건 만족도 수준	5점 척도 (높을수록 만족도 높음)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는가?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다섯째, 사회관계는 친구유무와 외출정도로 측정했다.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이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는 친구가 없는 경우 친한 친구가 없는 것으로 측정했다. 외출 정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외출한 적이 없는 경우 외출횟수가 적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개인이 생각하기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관한 주관적 인식(5점 척도)으로 측정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행복조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구분했다.

(2) 다중격차 집단의 식별

본 연구는 삶의 질의 격차를 다중격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II-4>는 다중격차 집단 식별 기준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경제 영역은 물질적 박탈 항목 중 4개 이상을 경험하거나 채무가 있는 경우 경제 영역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구분했다. 둘째, 교육 영역의 경우 전체 청년층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은 졸업을 유예한 경험이 있는 경우, 졸업생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을 교육 영역의 삶의 질이 낮다고 판단했다. 셋째, 노동 영역은 졸업생에 한하여 지표에 반영했다. 미취업인 경우 노동 영역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구분했다. 다섯째, 건강 영역은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경우, 사회관계는 친한 친구가 없거나 집 밖으로 거의 외출하지 않는 경우 삶의 질이 낮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행복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조건에 관해 만족도가 낮은 경우 삶의 질이 낮다고 구분했다.

표 II-4 다중격차 집단의 영역별 식별 기준

영역	내용		
	전체	재학생	졸업생
경제	4개 이상 물질적 박탈 경험 or 채무 있음	좌동	좌동
교육	대학진학 안함	졸업유예	고졸이하
노동	-	-	미취업
건강	정신건강 낮음	좌동	좌동
사회관계	친한 친구가 없음 or 외출하지 않음	좌동	좌동
행복	행복조건 만족도 낮음	좌동	좌동

다중격차 집단은 앞서 제시한 삶의 질 지표(전체 5개 영역, 재학생 5개 영역, 졸업생 6개 영역)에 대해 3개 이상 중복 경험한 집단으로 정의했다. 한편, 삶의 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모호한 일부 지표(부모로부터의 독립, 재학 중 근로 등)는 다중격차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교육과 노동은 분석 대상의 특성(전체, 재학생, 졸업생)에 따라 다른 지표를 적용했다. 노동의 질을 의미하는 고용 안정성과 직장조건 만족도는 취업 청년층에만 적용 가능한 지표이므로 다중격차 집단 식별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3) 다중격차 위험 요인 분석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어떠한 특성이 다중격차를 경험할 위험을 높이는지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표 II-5>는 다중격차 위험 요인분석 모형 개요이다. 종속변수인 다중격차 위험 여부는 삶의 질 지표 중 3개 이상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독립변수는 청년층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요 인구학적 변수인 성별, 만 나이, 거주 지역, 가구원수, 혼인상태, 자녀 수, 가족배경으로 구성했다. 가족배경은 다중격차가 사회구조적 불평등으로 고착화되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변수이다. 세대 간 불평등 이전 연구의 변수 측정 방법을 반영해 부모의 교육수준(부모의 교육수준 중 높은 경우)으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다중격차 여부인 종속변수에 포함되므로 변수의 동시성으로 인한 역의 인과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를 피하기 위해 독립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삶의 격차와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므로 변수간 관계를 설명하는 엄격한 가설을 설정하지 않았다.

분석 대상은 전체 청년층, 재학생, 졸업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인 경우 프로빗 모형이나 로짓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이용해 분석하였다(Angrist & Pischke, 2008).

표 II-5 다중격차 위험 요인 분석 모형

변수명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	다중격차 위험		삶의 질 지표 중 3개 이상 중복 경험=1
독립변수	개인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만 나이	생년기준 만나이
		거주 지역	서울, 광역시=1, 그 외 지역=0
		가구원수	명
		혼인상태	유배우자=1, 무배우자=0
		자녀 수	명
	가족배경	부모교육 수준	교육연수 (초졸 6년, 중졸 9년, 고졸 12년, 대졸 16년, 대학원졸 18년)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졸 이상)

4.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표 II-6〉은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이다. 전체 분석 대상 중 남성은 52.8%였다. 재학생은 58.6%, 졸업생은 48.8%가 남성이었는데 군복무로 인한 차이로 여겨진다. 전체 분석 대상 중 대도시 거주자는 47.0%였으며, 재학생 중 51.2%, 졸업생 중 44.1%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이 도시를 중심으로 분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분석 대상의 평균 가구원수는 3.25명이었으며 재학생과 졸업생도 이와 유사하였다. 전체 분석 대상 중 기혼자는 13.3%였으며, 재학생의 4.9%, 졸업생의 19.1%가 기혼자였다. 자녀의 수는 매우 낮았는데 전체의 경우 평균 0.16명이었고 재학생은 0.07명, 졸업생은 0.22명이었다.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는 최근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하며,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기혼율과 자녀 수 차이는 정규학교 졸업 이후에 결혼을 하고 그 이후 출산하는 청년층의 생애이행 순서와 일치한다(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전체

집단의 아버지 교육연수는 평균 12.9년, 어머니는 평균 12.5년이였다. 졸업생에 비해 재학생의 부모 교육연수가 다소 높았는데, 재학생의 경우는 대학, 대학원생만 포함되므로 부모 교육수준과 자녀 교육수준의 정적인 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II-6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대학, 대학원생	졸업생	전체
남성(%)	58.60	48.76	52.77
만 나이 평균(sd)	22.22(2.54)	25.44(2.73)	24.13(3.09)
대도시 거주(%)	51.21	44.07	46.98
가구원수 평균(sd)	3.39(1.21)	3.15(1.22)	3.25(1.22)
기혼(%)	4.94	19.12	13.33
자녀 수 평균(sd)	0.07(0.35)	0.22(0.63)	0.16(0.54)
부 교육연수 평균(sd)	13.44(2.27)	12.49(2.49)	12.88(2.45)
모 교육연수 평균(sd)	12.95(2.11)	12.15(2.25)	12.48(2.23)
부모 경제적 수준 평균(sd)	5.71(1.63)	5.43(1.55)	5.55(1.59)

2) 청년 삶의 질 격차 분석

여기서는 앞에서 제시한 삶의 질 지표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경험을 한 청년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먼저 청년의 재학 여부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을 분석하고, 이어서 가족배경에 따라 삶의 질 격차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모 교육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 집단 간 차이는 분포는 카이스퀘어 검증, 평균치는 t -test, F -test를 이용해 검증하였다.

(1) 1988~1998년생 청년 삶의 질

〈표 II-7〉은 전체 분석 대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재학생), 졸업 청년(졸업생)의 삶의 질 현황이다.

표 II-7 19~29세 청년의 삶의 질(1988~1998년 생)

삶의 질 영역		전체	대학, 대학원생	졸업생
경제 영역	채무 있음(%)	16.47	13.69	17.92
	물질적 박탈 경험 있음(%)	43.78	43.34	43.34
	4개 이상 박탈 경험 있음(%)	4.05	4.46	3.76
	독립함(%)	20.11	13.69	28.07
노동 영역	미취업(%)	35.16	42.55	19.93
	고용안정 여부(%)	59.97	27.68	71.72
	직장만족도(평균, sd)	3.25(0.89)	3.31(0.91)	3.22(0.88)
교육 영역	대학 미진학(%)	24.02	-	-
	졸업유예 경험 있음(%)	-	13.55	-
	교육연수(평균, sd)	-	-	13.95(1.83)
건강 영역	정신건강 나쁨(%)	26.97	24.81	28.44
사회관계 영역	친한 친구 없음(%)	2.63	1.23	3.59
	외출횟수 낮음(%)	3.08	1.48	4.17
행복 영역	행복 조건을 갖춘 정도(평균, sd)	3.12(0.95)	3.16(0.96)	3.10(0.94)
N		1,081	465	616

주: 1) 고용안정 여부와 직장만족도는 취업자(총 690명, 재학 195명, 졸업 495명)를 대상으로 분석함.
 2) 고용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가 포함됨.

경제 영역에서 전체 청년 중 16.5%가 채무가 있었으며 재학생의 경우는 13.7%, 졸업생은 17.9%로 졸업생의 채무 경험 비중이 더 컸다. 4개 이상 박탈을 경험한 물질적 박탈상태에 놓인 청년은 4.1%였으며 재학생은 4.5%, 졸업생은 3.8%로 재학생의 물질적 박탈 상태인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의 경우 전체 청년의 35.2%가 미취업자였으며, 재학생은 42.6%, 졸업생은 19.9%가 미취업자였다. 교육의 경우 전체 청년 중 24.0%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으며 재학생의 13.6%가 졸업을 유예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졸업생의 평균 교육연수는 14.0년(전문대학 졸업 수준)으로 최근 청년층의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준다. 사회적

관계에서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6%였는데, 재학생은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가 1.2%로 매우 낮고 졸업생은 3.6%로 재학생에 비해 다소 높았다. 건강 영역에서 주관적 정신건강 문항 6개의 총점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이 낮은 경우는 전체 청년의 27.0%였고 재학생은 이보다 낮은 24.8%였으며, 졸업생은 28.4%로 재학생보다 높았다. 행복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관한 만족도는 모두 유사했다.

(2) 가족배경에 따른 청년 삶의 질 격차

〈표 II-8〉은 가족배경에 따른 청년의 삶의 질 격차이다. 첫째, 경제 영역의 경우 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 미만인 저학력 부모를 가진 경우 23.0%, 전문대 이상 고학력 부모를 가진 경우 13.9%로 약 10%포인트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9개 물질적 박탈 항목 중 한 번이라도 4개 이상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여 물질적 박탈 상태에 있다고 확인되는 청년은 저학력 부모를 가진 경우는 13.6%, 고학력 부모를 가진 경우는 2.8%가 물질적 박탈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 < .001$). 부모로부터 독립했다고 응답한 청년은 저학력 부모인 경우는 33.0%, 고학력 부모인 경우는 14.9%로 약 두 배 이상 크게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시기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둘째, 노동 영역의 경우 전체 청년의 35.2%가 미취업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취업자 중 정규직이거나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는 전체의 60.0%였으며, 직장조건 만족도는 평균 3.2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취업여부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 교육수준이 고졸미만이거나 고졸인 경우, 대졸 이상에 비해 취업률이 높았다($p < .001$). 셋째, 교육의 경우 전체 청년의 24.0%가 대학미진학자였다. 부모가 저학력인 경우 대학미진학

자는 44.1%였으며, 고학력인 경우는 9.9%로 크게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 < .001$). 넷째, 건강 영역에서 주관적 정신건강 문항 6개의 총점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모가 저학력인 경우 36.4%, 고학력인 경우 28.1%였는데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의 경우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부모가 저학력인 경우는 8.1%, 고학력인 경우는 1.5%였고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 < .01$). 방이나 집 밖으로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부모가 저학력인 경우는 8.1%, 고학력인 경우는 2.2%였다($p < .05$). 마지막으로 행복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점수는 전체적으로 유사했다.

표 II-8 19~29세 청년의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삶의 질(1988~1998년 생)

삶의 질 영역		부모 교육수준			전체	차이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 이상		
경제 영역	채무 있음(%)	23.03	17.45	13.86	16.47	*
	물질적 박탈 경험 있음(%)	46.45	46.06	39.82	43.78	
	4개 이상 박탈 경험 있음(%)	13.63	3.83	2.80	4.05	***
	독립함(%)	33.03	22.12	14.87	20.11	***
노동 영역	미취업(%)	35.81	29.22	44.25	35.16	***
	고용안정 여부(%)	55.59	62.50	55.80	59.97	
	직장만족도(평균, sd)	3.21 (0.82)	3.25 (0.87)	3.26 (0.93)	3.25 (0.89)	
교육 영역	대학 미진학(%)	44.06	30.99	9.89	24.02	***
건강 영역	정신건강 나쁨(%)	36.40	25.22	28.12	26.97	
사회관계 영역	친한 친구 없음(%)	8.10	2.81	1.46	2.63	**
	외출횟수 낮음(%)	8.05	3.08	2.24	3.08	*
행복 영역	행복 조건을 갖춘 정도(평균, sd)	2.95 (0.99)	3.12 (0.93)	3.15 (0.96)	3.12 (0.95)	
N		66	616	399	1,081	

주: 1) 고용안정 여부와 직장만족도는 재학중 취업자(690명)를 대상으로 분석함.
 2) 고용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가 포함됨.
 3) 차이는 χ^2 와 t -값에 대한 유의도 검증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I-9〉는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19~29세 청년의 삶의 질이 부모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른지를 분석한 표이다.

표 II-9 대학, 대학원 재학생의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삶의 질

삶의 질 영역		부모 교육수준		전체	차이
		고졸이하	전문대 이상		
경제 영역	채무 있음(%)	19.21	7.64	13.69	***
	물질적 박탈 경험 있음(%)	47.33	38.96	43.34	
	4개 이상 박탈 경험 있음(%)	6.58	2.14	4.46	*
	부모로부터 독립함(%)	10.98	5.68	13.69	+
노동 영역	재학 중 근로(%)	48.48	36.64	42.55	*
	고용안정 여부(%)	27.92	27.32	27.68	
	직장만족도(평균, sd)	3.33(0.92)	3.28(0.91)	3.31(0.91)	
교육 영역	졸업유예 경험 있음(%)	15.77	11.16	13.55	
건강 영역	정신건강 나쁨(%)	24.30	25.36	24.81	
사회관계 영역	친한 친구 없음(%)	1.87	0.53	1.23	
	외출횟수 낮음(%)	0.84	2.18	1.48	
행복 영역	행복 조건을 갖춘 정도(평균, sd)	3.16(0.99)	3.17(0.93)	3.16(0.96)	
N		243	222	465	

주: 1) 고용안정 여부와 직장만족도는 재학중 취업자(195명)를 대상으로 분석함.

2) 고용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가 포함됨.

3) 차이는 χ^2 와 F 값에 대한 유의도 검증결과임. $+p < .10$, $*p < .05$, $**p < .01$, $***p < .001$.

재학 청년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미만인 저학력자의 수가 매우 적어서 고졸이하와 전문대 이상으로 구분해 삶의 질 차이를 확인했다. 경제 영역은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부모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전문대 이상인 경우에 비해 채무, 심각한 물질적 박탈 상태인 비중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채무 $p < .001$, 심각한 물질적 박탈 상태 $p < .05$). 노동 영역에서 고용안정성 여부나 직장만족도는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학근로 여부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다. 즉, 부모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재학생이 전문대 이상인 경우에 비해 재학 중 근로를 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였으나($p < .05$), 교육, 건강, 사회적 관계, 행복조건 만족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학생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청년층이 제외되어 있어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삶의 질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II-10〉은 정규학교를 졸업한 19~29세 청년 삶의 질이 부모교육 수준에 따라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청년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부모 교육수준이 저학력인 경우 고학력인 경우에 비해 경제, 교육 영역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 건강, 행복조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10 정규학교 졸업생의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삶의 질

삶의 질 영역		부모 교육수준			전체	차이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 이상		
경제 영역	채무 있음(%)	24.82	16.34	20.76	17.92	
	물질적 박탈 경험 있음(%)	61.13	46.64	38.96	43.34	**
	4개 이상 박탈 경험 있음(%)	13.28	2.57	3.51	3.76	*
	부모로부터 독립함(%)	39.57	27.95	24.99	28.07	*
노동 영역	미취업(%)	25.72	17.97	22.41	19.93	
	고용안정 여부(%)	57.55	73.84	70.84	71.72	
	직장만족도(평균, sd)	3.21 (0.82)	3.22 (0.86)	3.25 (0.94)	3.22 (0.88)	
교육 영역	교육연수(평균, sd)	13.42 (1.66)	13.64 (1.75)	14.75 (1.78)	13.95 (1.83)	***
건강 영역	정신건강 나쁨(%)	37.71	25.87	31.15	28.44	
사회관계 영역	친한 친구 없음(%)	9.70	3.27	2.48	3.59	*
	낮은 외출횟수(%)	8.07	4.50	2.31	4.17	
행복 영역	행복 조건을 갖춘 정도(평균, sd)	2.92 (0.97)	3.10 (0.90)	3.15 (0.99)	3.10 (0.94)	
N		53	381	182	616	

주: 1) 고용안정 여부와 직장만족도는 재학중 취업자(495명)를 대상으로 분석함.
 2) 고용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가 포함됨.
 3) 차이는 χ^2 와 F 값에 대한 유의도 검증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3) 다중격차 집단의 식별

여기서는 앞에 제시한 6개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표를 중복하여 경험한 다중격차 집단을 식별하고 특성을 확인하였다. 삶의 질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어려운 노동 영역은 전체와 재학생의 경우 지표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경제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집단은 전체 16.8%였다. 둘째, 교육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청년은 26.4%였는데, 재학생은 14.6%, 졸업생은 40.5%였다. 건강 영역 삶의 질이 낮은 청년은 전체 30.4%였으며, 사회관계 영역의 삶의 질이 낮은 청년은 6.3%, 행복영역 삶의 질이 낮은 청년은 29.3%였다.

6개 영역에서 낮은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를 중복하여 경험한 다중격차 집단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는 <표 II-11>과 같다. 첫째, 전체 청년의 경우 단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청년은 15.1%, 졸업생은 4.3%에 불과했으나, 재학생의 경우는 46.0%이었다. 3개 이상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청년은 전체의 20.9%였고, 재학생은 5.7%, 졸업생은 28.7%였다.

표 II-11 삶의 질 격차의 구성 요소 및 다중격차 분포

삶의 질 영역		전체	재학생	졸업생
1. 경제 (채무 or 4개 이상 중복박탈)		16.81	13.98	16.81
2. 교육 (대학미진학 / 졸업유예 / 고졸)		26.42	14.57	40.46
3. 노동 (미취업)		-	-	19.41
4. 건강 (정신건강 낮음)		30.40	28.74	31.50
5. 사회관계 (친구 없음 or 낮은 외출횟수)		6.27	3.38	8.10
6. 행복 (행복조건 만족도 낮음)		29.27	30.95	28.20
다중격차 누적분포	0개	15.09	45.99	4.33
	1개 이상	84.91	54.01	95.67
	2개 이상	52.29	22.74	66.83
	3개 이상	20.85	5.66	28.68
	4개 이상	6.23	2.34	8.91

다음 <표 II-12>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다중격차 집단 분포이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중격차 집단에 속하는 청년 비중이 높았다. 연령의 경우 20대 초반보다 20대 중반 청년이 다중격차를 경험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는 다소 모호하였는데, 삶의 질이 낮은 지표를 경험하지 않은 청년 비중은 기타 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적었는데(대도시 17.0%, 기타지역 13.4%), 3개 이상 중복 다중격차 집단 비중은 기타 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더 높았다(대도시 16.7%, 기타지역 24.5%). 혼인상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비중은 미혼 청년이 기혼 청년보다 높았으나, 다중격차 집단 규모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 인구학적 특성별 다중격차 집단 분포(전체 청년)

(단위: %)

		다중격차 수준				
		0개	1개	2개	3개	4개
성별	여성	14.50	34.04	31.78	14.11	5.56
	남성	15.62	31.35	31.13	15.07	6.83
연령	19~24세	22.68	31.6	28.51	12.11	5.09
	25~29세	6.70	33.75	34.67	17.38	7.49
거주 지역	서울시, 광역시	16.97	34.34	31.95	10.86	5.88
	기타 지역	13.43	31.10	30.99	17.94	6.55
혼인상태	미혼	15.78	33.76	30.34	14.34	5.77
	기혼	10.21	25.04	38.93	16.55	9.28
자녀유무	자녀 없음	15.13	33.26	31.16	14.66	5.78
	자녀 있음	14.18	26.35	34.48	14.38	10.61
부모교육	고졸 미만	7.12	27.94	30.81	15.86	18.28
	고졸	11.32	30.44	35.32	17.05	5.87
	대졸 이상	22.18	37.95	25.99	9.79	4.09

자녀가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비해 4개 이상 다중격차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는 5.8%, 자녀가 있는 경우는 10.6%였다. 이른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한 영향일 수 있다.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앞에서 살펴봤던 각 영역별 비교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부모 교육수준이 저학력인 경우에 비해 고학력인 경우 다중격차 상태에 놓이는 청년층의 비중이 컸다. 부모 교육수준이 고졸미만인 경우 3개 이상 다중격차를 경험하는 청년은 24.1%로 10명 중 2명이 다중격차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모 교육수준이 전문대학 이상 고학력인 경우에는 13.9%에 불과했다.

〈표 II-13〉과 〈그림 II-1〉은 3개 이상 영역 다중격차 집단의 영역별 분포이다. 전체 청년층 중 다중격차 집단은 건강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7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복, 교육, 경제, 사회관계 순으로 삶의 질이 낮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학생 집단은 건강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92.0%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행복, 교육, 경제, 사회관계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졸업생 중 다중격차 집단은 노동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에 해당하는 비율이 8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건강, 교육, 행복, 경제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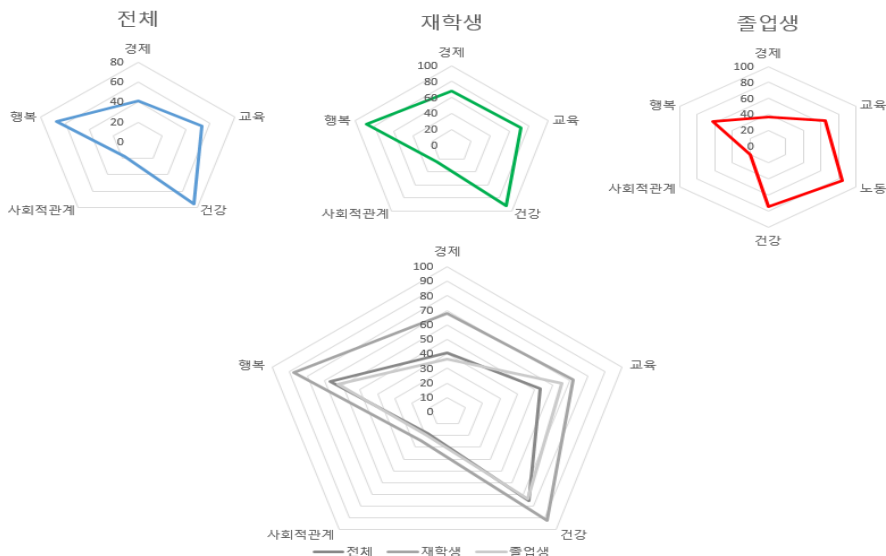


그림 II-1 다중격차 집단의 영역별 삶의 질 분포

표 II-13 다중격차 집단의 영역별 분포(중복응답)

(단위: %, 명)

삶의 질 영역	전체	재학생	졸업생
1. 경제 (채무 or 4개 이상 중복박탈)	41.05	68.00	36.56
2. 교육 (대학미진학 / 졸업유예 / 고졸)	52.84	72.00	65.05
3. 노동 (미취업)	-	-	84.41
4. 건강 (정신건강 낮음)	75.55	92.00	74.19
5. 사회관계 (친구 없음 or 낮은 외출횟수)	17.90	24.00	19.35
6. 행복 (행복조건 만족도 낮음)	67.25	88.00	62.37
N	229	25	186

- 주: 1) 3개 이상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다중격차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함.
 2) 각 영역은 다중격차 집단을 N으로 했을 때 이들 중 삶의 질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을 %로 표기함.

4)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여기서는 3개 이상 다중격차 집단에 속할 위험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표 II-14>는 다중격차 집단 여부를 종속변수로,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의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선형확률모형 분석 결과이다.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연령, 거주지역, 부모의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1세 많아지면 다중격차를 경험할 확률이 1.0% 증가하였다(0.010*, ± 0.00). 기타지역에 비해 서울시,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 다중격차를 경험할 확률이 6.3% 감소했다(0.063*, ± 0.03). 부모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미만 저학력인 청년에 비해 전문대 졸업 이상 고학력인 경우 다중격차를 경험할 확률은 17.5% 감소하였다(-0.175**, ± 0.06).

재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전체 청년 대상 분석결과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 교육수준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은 대학

에 진학한 고학력 집단이므로 저학력 부모의 영향이 약화될 수 있다. 한편, 전체 청년 대상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혼인상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인 재학생은 미혼인 재학생에 비해 다중격차를 경험할 확률이 17.2% 낮았다(-0.172*, ± 0.07).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전체 청년 분석결과와 유사했다. 연령, 거주 지역,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이 다중격차 집단에 속할 위험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14 다중격차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기준)		전체	대학, 대학원 재학	졸업
성별(여)		0.026	-0.008	0.060
		(0.03)	(0.02)	(0.04)
연령		0.010*	0.016**	-0.017*
		(0.00)	(0.01)	(0.01)
거주지역(기타지역)		-0.063*	0.009	-0.074*
		(0.03)	(0.02)	(0.04)
혼인상태(미혼)		-0.013	-0.172*	-0.019
		(0.06)	(0.07)	(0.07)
가구원수		-0.011	0.005	-0.024
		(0.01)	(0.01)	(0.02)
자녀 수		0.014	0.090	0.025
		(0.04)	(0.08)	(0.04)
부모교육 (고졸미만)	고졸	-0.097	-0.013	-0.105
		(0.06)	(0.08)	(0.07)
	대졸 이상	-0.175**	-0.027	-0.188*
		(0.06)	(0.08)	(0.07)
Cons		0.145	-0.308*	0.922***
		(0.12)	(0.14)	(0.19)
F-value		4.160	1.490	3.420
R^2		0.033	0.040	0.042
N		1,079	465	614

주: 1) 괄호안은 Robert S.E. 임.

2) * $p < .05$, ** $p < .01$, *** $p < .001$.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19~29세, 1988~1998년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경제, 교육, 노동, 건강, 사회관계, 행복 6개 영역 삶의 질 격차와 다중격차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20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년과 졸업한 청년을 구분하여 집단별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삶의 질 격차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삶의 질, 다중격차 위험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개 영역별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다수가 삶이 질이 낮음을 확인했다. 채무가 있거나 물질적 박탈 상태에 놓인, 경제적 삶의 질이 낮은 청년은 전체 청년의 16.8%였다. 교육 영역에서 대학 미진학 청년은 26.4%였으며,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응답한 청년은 전체 청년의 30.0%에 달했다. 친한 친구가 없거나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가 드문 청년은 전체 청년의 6.3%였으며, 행복을 위한 최우선 조건을 충족하는 정도가 낮은 청년은 29.3%였다.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교했을 때 재학생에 비해 졸업생의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각 영역 중 3개 이상을 경험한 다중격차 집단을 식별한 결과, 전체 청년 중 27.1%가 다중격차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졸업생 중 다중격차 집단은 37.6%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삶의 질 격차 수준이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배경 변수인 부모의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삶의 질 지표와 다중격차 집단 규모, 다중격차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저학력인 경우 고학력인 경우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낮고 다중격차 상태에 놓일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이 처하는 다차원적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층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아동, 여성, 노인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새로운 정책 대상이다. 청년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는 노동시장 이행 실패로 인한 실업을 증가이다. 그러나 이는 청년층이 직면하는 삶의 일부분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청년층의 다수가 경제, 교육, 노동, 건강, 사회관계, 행복 등 삶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전통적 사회복지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

둘째, 청년층의 내적 이질성과 격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청년층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이행기의 동질적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실업대책은 주로 단기적 소득지원,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청년층 중 27.1%가 5개 영역 중 3개 이상의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다중격차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내에서 열악한 상태에 놓인 취약집단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특화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차원에서 청년층의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청년층의 삶의 질이 결국 그들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기에 위치한 청년층의 삶의 격차는 세대 간 이전을 통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현재 청년층이 직면하는 다중격차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아동기에서 청년기까지 누적된 결과가 청년기의 생애과정 위험에 표출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에 걸쳐서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최근 일부 민간영역에서 사회연대채권 등을 통해 시도되고 있는 빈곤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공공영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년층에 관한 학술적, 정책적 연구의 확대가 시급하다.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층에 관한 연구가 누적되어온 서구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 청년층은 최근에서야 연구대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한국 청년층의 특성과 이들이 사회정책 욕구에 관해 충분히 알려진 바가 없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집중하거나 교육불평등 연구에 집중해왔을 뿐이다. 보다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청년층을 연구하여 한국 청년층에 관한 실증적인 정보와 자료가 누적된다면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청년층의 삶의 질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삶의 질을 다중격차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청년층의 삶의 질을 횡단면으로 분석하여 삶의 질이 객관적으로 높고 낮은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최근 청년층의 삶의 질이 악화 혹은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 혹은 다년간 자료를 이용한 코호트 비교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외국 청년층과의 비교를 통한 연구 역시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하고 있으나 구성지표 중 일부는 객관적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삶의 질의 주요지표를 누락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 영역에서 소득이나 자산을 객관적 지표로 반영하지 못했고 주거 영역은 누락되었다. 이는 청년층 사회경제적 실태조사 자료의 한계이다. 셋째, 본 연구는 청년층의 삶의 질 실태를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및 선행연구가 미흡하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장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 청년들의 참여 인식을 중심으로

- 1. 서론
-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3. 실증조사분석
- 4. 결론

1. 서론

1) 연구의 관심과 목적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이 정부의 정책 또는 지방 행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참여가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다. 예컨대, 수원시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수원 청소년 의회, 전남 나주시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 예산학교, 중앙정부가 청년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만든 일자리 위원회 등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국정 및 시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은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이들의 현실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발적인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권 교육 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만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⁶⁾,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소)년들을 소통하고 대화하여,

5) 이 장은 박진우 선임연구원, 김다은 연구원(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이 집필하였음

이러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정책의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점차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년을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 낸 것만큼이나, 실제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⁷⁾ 그 결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이른바 거버넌스라는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참여를 전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활성화가 곧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곤 한다(이승종, 2006). 특히,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이러한 거버넌스 형태의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사회 참여 수준 혹은 의식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기도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혹은 정치참여) 의식은 인터넷이 확산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과거 두발규제에 맞서 전개된 온라인 오프라인 두발자유화 운동, 2002년 미 장갑차에 희생당한 여중생을 추모하는 집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는 촛불 집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그리고 최근 투표 연령 인하를 주장하는 청소년 시위 등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활발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창호, 정의철, 2008).

그러나 문제는 실제 청(소)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정책기구가 실질적으로 청(소)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용했다는 사례 또는 보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립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

6) 현재 청년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체감실업률을 고려하면 이 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머니투데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 이제 청년들도 피부로 체감”, 2018).

7) 특히,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 1년에 두 번꼴로 대책이 나왔으나, 내놓는 대책마다 제목만 다르고 대상자만 다른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다(매일경제, “정권 세 번 바뀌어도 청년실업대책은 봉어 빵.. 실업자 5만 늘어” 2015).

원회가 존재하였으나, 실질적인 청년정책의 수립과 조정에는 미흡했다(이윤주, 김기현, 하형석, 2017: 6).⁸⁾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 정책이 거의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 전통적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을 성인으로 가는 과정으로만 치부해 버리고, 어른이 되기까지의 고생을 오히려 약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 관념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 시대에 이후에 자란 청(소)년 세대들의 삶을 기성세대가 견디어야 했던 그 시절에 비교하여 배부른 투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국민의제, 2016).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혹은 사회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는 오늘날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의 참여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거버넌스 형태의 기구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를 청(소)년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거버넌스를 활성화 조건을 찾는다는 점에서 탐색적 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수행의 방향 및 구성

이 연구의 크게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된다. 하나는 제도설계의 맥락에서 현재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버넌스 기구가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를 청년들의 거버넌스 수준, 이른바 참여 수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그동안의 청소년 관련 정책기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참여수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담당자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형태라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즉,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된 기구가 아니라, 정책집행자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기구임을 비판하기 위한

8) 현재 문재인 정부도 청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위원회의 설립은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실업 및 일자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의 시민 참여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참여수준을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조사한 '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들어가 있는 측정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다양한 집단별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참여수준을 진단한다.

다른 하나는 거버넌스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거버넌스 활성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그것이 실제 청(소)년들의 거버넌스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는 작업이다. 이것은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소)년층의 의식을 개선하고 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청(소)년 중심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그동안 거버넌스 활성화, 더 구체화한다면 시민 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도출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측정한 자료로 통해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이 연구의 관심과 목적 그리고 연구수행의 방향과 구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논의로서, 거버넌스와 참여의 관계에 대해 제시하고, 왜 거버넌스를 활성화에 있어 청년 참여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은 실증분석으로, 이 연구가 주목하는 청년 참여의 수준, 그리고 청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 제4장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거버넌스와 참여

최근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를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력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버넌스는 학자들에 따라 혹은 학문의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과거 국가(또는 관료제)의 전통적인 행정운영 방식의 대안으로서 등장하게 됐는데, 이것은 국가를 둘러싼 환경, 즉 국가-사회(또는 중앙과 지방) 간의 변화에 기인한다. 예컨대, 정부의 강력한 계층제적 통치방식은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에 따른 국가 중심의 통치체제의 약화 등으로 인해 그 힘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사악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 및 지방자치를 계기로, 국가를 상대로 한 지방 또는 사회의 자율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통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시점에서, 국가 중심적인 정책집행 방식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더 유용한 방법과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오늘날의 정책의 장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다층적 수준에서 펼치는 게임으로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공공관리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 것이며(Hooghe & Marks, 2001), 거버넌스가 바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거버넌스가 정확히 어떠한 개념인지 학자들 또는 실무자들 사이에 합의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자들에 따르면, Rhodes(1997), Stoker(1998), Pierre(2000), Kooiman(2000) 등 서구의 유수의 학자들은 거버넌스를 국정 양식의 관점에서 ‘정부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 또는 ‘정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조정 체계’ 등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이것은 거버넌

스를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체제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명석(2002)은 거버넌스를 최광의(사회 문제), 광의(정부 관련 문제) 그리고 협의(신 거버넌스 관련)의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사회적 조정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김석준, 이선우, 문병기와 박진영(2000)도 거버넌스를 광의의 맥락에서 ‘정부 중심의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호협력 조정 양식’, 그리고 협의의 맥락에서 ‘공식적인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 의존성에 기반하여 협력하는 조정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권혁주(2007)는 거버넌스를 ‘다양한 정책당사자가 정치적 행위를 통해 형성하는 역동적 관계를 관리하고 정책의 목표를 추구하는 일련의 목적 추구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버넌스는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자가 정책을 주도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가에 따라, 거버넌스는 계층제, 시장, 그리고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표 III-1〉 참조).

표 III-1 거버넌스의 주요 특징들

구분	계층제(hierarchy)	네트워크(network)	시장(market)
규범적 기초	고용관계	보충능력	계약-재산권
의사소통수단	일상적 절차	관계	가격
갈등해결방법	행정명령-감독	호혜-명망과 관심	흥정, 사법적 통제
신축성 정도	낮음	중간	높음
집단간 기여도	중간	높음	낮음
분위기	공식적, 관료적	개방적, 상호이익	정확 또는 의심
행위자 선호	의존적	상호 의존적	독립적
혼합적 특징	거래반복, 위계적 문서로의 계약	지위계층, 복수의 파트너, 공식적 규칙	비공식 조직, 시장적 특징: 영리센터, 이전가격

* 출처: 최성욱(2003). 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신거버넌스 시각에서의 비판적 고찰. p.115의 표1을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제시함.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거버넌스가 시민 참여가 전제로 하고 있는 주요 개념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거버넌스가 갖고 있는 개방성, 상호의존성, 수평적 관계 등의 원칙은 시민 참여가 추구하고 있는 평등성, 공동체 의식 배양 등의 가치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민 참여는 “시민에 의한 정치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의 관심 주요 가치들을 정부 및 공공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의 전반”을 의미한다 (Creighton, 2005: 7). 서구를 중심으로 시민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이유는 정치적 불평등에 기초한다. Dahl(1971, 1998)에 따르면, 정치적 평등성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념이며, 이것이 개별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표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치적 불평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시민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부 정치엘리트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는 일반 시민들은 권력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조직적인 정치참여는 이러한 권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치적 효능감 및 민주주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 행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지 않을 경우, 시민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선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정부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반응과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 이른바 시민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Verba & Nie, 1972; Verba, Schlozman & Brady, 1995; Elkin & Soltan, 1999; Sirianni & Friedland, 2001).

거버넌스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치적인 문제해결을 방안을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배양된다는 점은 시민 참여가 좋은 시민을 배양한다는 특징과 유사하다(Putnam, 1995; Loeb, 1999; Ravitch & Viteritti, 2001; Skocpol & Fiorina, 1999; Rosenstone & Hansen, 2003).

예컨대,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 형성 및 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라는 기회를 통해, 좋은 시민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방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특히, 시민 참여는 다양한 사람들과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독불장군식의 일방주의가 구성원 전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포용하는 방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가 정부의 정책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었던 시민의 대표성 및 정치적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것도 거버넌스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Dahl(1998)은 정치적 평등성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념이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야 할 정도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치적 평등이 대부분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술한 Dahl(1971)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저개발국가와 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표방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1인1표의 선거제도, 투표 이외의 직접 참여제도 등을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모든 국가에서 정치적 불평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권력에 대한 접근수단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예컨대, 일부 정치엘리트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는 일반 시민들은 권력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참여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되어 정치적 효능감이 떨어져,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 참여는 정부의 정책 형성 및 집행에 대한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불평등을 개선하여 더 나은 정책을 산출을 기대하게 만든다(Erickson & Nosanchuck, 1990; Olsen, 1972; Rogers, Barb, & Bultena, 1975).

시민 참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거버넌스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는 시장이 계층적인 지방 관료제의 정점에 서서 지방정부 정치 및 정책을 지배하는 시장독주의 정치체제를 그 특징으로 한다. 지방자치의 도입으로 가능해진 시민들의 시장 선출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시의 권력은 시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시민 개개인의 요구 또는 주민단체,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들의 집합적 요구가 여과됨이 없이 그대로 지방정부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당해 요구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정치적 이해에 따라 수용시기와 수용조건이 조절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결정과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을 가져오고 있다(유재원, 2003: 106).

거버넌스와 시민 참여가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거버넌스의 확산이 곧 시민 참여의 확대와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와 시민 참여 간의 유사한 특성은 거버넌스의 확산이 곧 공공정책에 대한 정부 이외의 시장과 시민사회의 참여확대를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시민 참여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이승중, 2006). 특히,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확산과 시민 참여의 확대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증결과(Box, 1998; 박희봉, 김명환, 2000; 김명숙, 2005; 박희봉, 2006) 거버넌스가 곧 시민 참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둘 간의 관계를 인과적 관계로 접근하기 보다는 공변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일부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둘 간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김종욱, 2012).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며, 이 연구는 거버넌스가 곧 시민 참여라 정의하고, 거버넌스의 활성화는 곧 시민 참여 활성화라는 논리적 전제를 기반으로, 청년 중심의 거버넌스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2) 거버넌스 활성화의 조건으로서 청년 참여의 중요성과 참여 유형

(1) 청년 중심의 거버넌스 현황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청년의 시각에서 해결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참여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그 동안 청년의 문제를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한 정책의 형성 및 추진이 청년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는 비판에 기인한다. 즉,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거나, 보여주기식 정책추진이 지속되면서, 청년의 삶의 질 개선, 또는 청소년이 고민하고나 있는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7년 5월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하여 청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기구 및 장치와 같은 거버넌스의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의 삶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소통 플랫폼인 ‘청년1번가’를 운영하였다. 청년1번가는 청년문제는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삶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청년이 정책 당국에 말하고 싶은 요구와 주장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청년1번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온라인으로서,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지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다른 하나는 오프라인으로서 전국 6개 권역(경상권, 충청권, 강원권, 전라권, 제주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최됐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7).

이에 더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참여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조진우, 이윤주, 2017: 5-6).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서울, 대구, 광주 등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들에서 청년이 중심이 된 거버넌스 형태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크게, 서울, 대구, 그리고 광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서울특별시에는 청년허브 위탁사업으로 운영되는 청년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정책과정에 대한 청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동 조직은 서울시의 청년정책 모니터링, 그리고 청년 관련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출발은 2012년으로서, 청년 명예 부시장의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동 조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및 청년그룹에 해당하거나,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청년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 다음 대구시도 2015년 3월 10일에 제정된 훈령에 기반하여, 청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동 조직은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 그리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시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직의 핵심 구성원인 청년위원의 참여자격은 “청년정책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지역 청년정책 발굴 등 위원회의 역할에 적합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해당 조직은 ①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창구 및 컨트롤타워 역할, ② 지역 청년문제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의제 발굴, ③ 지역 현안 청년문제 도출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도 청년 중심 거버넌스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이다. 광주광역시에는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안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에, 정책집행 단위로서, 청년정책과, 정책형성 및 소통 단위로서 청년센터, 청년정책 파트너십 기구로서 청년위원회, 청년 거버넌스 제도 장치로서 청년정책 기본조례, 청년정책 종합 구성으로 청년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운영중인 청년위원회는 ①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②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③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④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참여의 중요성

시민 참여가 활성화될 경우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며, 많은 선행연구들이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연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연구대상으로 상정된 것은 일반 시민들, 즉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달리 이 연구는 청년에 주목하여 거버넌스 활성화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청년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참여와 같은 민주주의를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행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모경환, 김명정, 송성민, 2010), 청년들의 시민 참여는 미래의 시민 참여 지속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시민 참여가 특정한 의도 또는 이해관계를 갖고 활용되기 보다는 하나의 습관으로서 활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시민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참여하는지, 혹은 어떠한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들의 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21세기 접어들면서 한국사회 청소년에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P세대’, 즉 참여(participation)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 출현한 것인데, 이들은 정치·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시시 때때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기도 하였다(변길섭, 2014: 2).⁹⁾ 결국, 기존의 기성세대와 다른 청년들만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기존의 거버넌스의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었던 형식적인 수준의 작동,

9) 물론 모든 청년 혹은 청소년들이 적극적이고 항의적인 형태의 행동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부 청소년들은 기존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이 접한 정보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김광웅, 방은령, 2001). 특히, 타 연령대에 비해 20대 청년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조한 투표율은 이러한 지적에 힘을 실어 준다.

또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실제 정책당사자들이 배제된 채 운영되는 위원회 및 협의회 같은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형태의 시민 참여에서 확장된 온라인 시민 참여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참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선 조건으로서 청년 참여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청년의 사회 혹은 정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90년 이후로 지역사회, 교육,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지방과 국가적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표명을 보장하는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사항, 그리고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운영위원회 관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인권법 등과 같은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청년들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은 청년 참여가 청년의 사회성을 발달을 강화시키고 시민적 유능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증가시키는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민소영, 이영순, 2014).¹⁰⁾ 즉,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변화에 발전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해 개방적이고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고, 사회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의

10)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는 정책과정에서의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995년 Board of Supervisors 관할 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조직은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에 관심을 가져온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청소년조직들이 함께 구성된 조직으로서, 청소년들이 시장을 포함하여 정책입안자들을 설득하고 조언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구성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해당 조직은 12세에서 23세 사이인 17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최소 1년 동안 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장은 1명의 위원과 인종, 성별, 성지향성 등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5명의 위원들을 추가로 임명하고, 11명의 슈퍼바이저들은 각각 1명의 위원을 임명한다(문성호, 2006: 207-208).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회 또는 정치권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비례대표, 청년정치 조직 창설 등 제도적 정치권에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을 통해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느끼는 고충과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나이가 많은 기성정치인 보다는 청년들 스스로가 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더 적합한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거버넌스를 시민 참여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시민 참여는 어떠한 유형을 구분될 수 있는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참여, 또는 시민 참여는 공공의 관심, 수요, 가치 등을 정부 및 공공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Creighton, 2005: 7; 김혜정, 2012: 215). 그리고 이러한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Verba와 Nie(1972)는 참여의 유형을 결과의 파급 범주, 갈등의 정도 및 목적에 따라, 투표참여, 선거운동참여, 지역활동 참여(Local Activity Participation), 공직자들과의 개별적 접촉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 선거 위원회는 참여를 투표참여, 정당 및 선거관련 참여, 원인 지향적 참여, 시민지향적 참여로 구분하고 있다(Electoral Commission, 2004). Dalton(2008: 33-34)은 참여형태로, 투표, 선고운동, 공직자 접촉, 지역공동체 활동에 더해서, 항쟁과 인터넷 참여 두 가지를 더하였다. 그리고 Roberts(2008: 237-241)는 시민의 직접참여 유형을 선거 참여, 개인참여, 소집단 참여, 대집단 참여로 구분하였다. OECD(2001)는 인터넷을 통한 시민 참여 방식 19가지로 하였다.

경험적 맥락에서 이러한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Huckfeldt(1979)는 참여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적 기반의 참여, 사회적 기반의 참여, 등 2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Stein과 Dillingham(2004)은 지방정부에 대한 참여 유형을 ① 청원서 서명, ② 데모나

가두행진 또는 보이콧 행사의 참여, ③ 동네일 관여, ④ 정치집단 참여, ⑤ 인종, 민족 또는 인권집단 참여, ⑥ 정당대회 참여, ⑦ 대통령 선거 참여, ⑧ 비종교적 조직 또는 이유로 돈을 기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이승종(2001)은 지방정치 참여를 ① 투표참여, ② 공직자 접촉, ③ 비접촉 참여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양수(2006)의 경우, 참여를 ① 순응적 참여, ② 적극적 참여, ③ 항의적 참여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는 시민 참여의 수준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자 한다. 하나는 자신의 의사를 전화, 혹은 집회를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표시 혹은 표출하는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직접 참여와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의사를 인터넷 게시판, 리본 달기, 그리고 온오프라인 서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간접 참여로 구분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직접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수준, 그리고 간접 참여를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수준으로 구분하여 해당 수준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거버넌스 활성화의 영향요인과 선행연구 검토

(1)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

거버넌스 활성화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 다시 말해 거버넌스가 갖고 있는 참여라는 속성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는 역으로 왜 사람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가의 질문과 그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Brady, Verba와 Kay(1995: 271)는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참여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시간, 돈과 같은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것은 참여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것이며, 누구도 참여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여를

제안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시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다. 하나는 시민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심리적 요인과 같은 개인 차원에서의 요인과, 다른 하나는 시민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개인적 차원 요인

가. 사회경제적 지위

먼저, 시민 참여 영향을 미치는 가장 보편적인 요소로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응답자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는 대부분의 시민 참여 연구가 시민 참여에 가장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박찬욱, 2005: 174).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핵심 요인으로 다루어진 변수들은 응답자 개인의 교육수준, 소득, 연령, 성별, 직업, 가족구조 등이었다(박찬욱, 2005; Verba, Nie, & Kim, 1987; Wolfinger & Wolfinger, 2008). 실제로 주요 연구들에서 제시된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시민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시민 참여 간의 통계적 관계가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시민 참여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결과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논리적 주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예컨대, 표준사회경제모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가, 아니면 보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전자는 소득, 교육, 직업 수준 등이 높을수록 참여활동이 활발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면, 후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참여를 핵심 도구로서 활용한다는 점을 주장한다(이승중, 2003: 254-25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소득은 시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득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참여의 기회와 수준을 결정짓는 기회의 여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가 용이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유민이, 2017; Brady, 2004).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생계유지를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민활동이 제약받게 되며, 그 결과, 투표율, 정파적 활동, 정부활동의 참여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Beeghley, 1986: 449-502). 특히, 참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기술, 역량들이 이러한 소득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소득은 시민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사회경제적 지위의 두 번째 핵심 변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교육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민 참여 연구들에서 교육수준은 정치적 기술과 자원의 증가, 사회활동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있으며, 시민의식 형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Dalton, 2008; Milbraith & Goel, 1977).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 번째 핵심 변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응답자 개인의 직업이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직업과 사회 참여는 밀접한 통계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의 여가활동 및 삶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연구에 발맞추어 국내 연구들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참여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예컨대, 박찬욱(1995, 2005)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사회적 위신, 그리고 소득이 높은 직업에 종사할수록 관계적 참여활동과 총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혜정(2009)도 소득과 교육수준을 사회경제적 지위로 설정하고, 이것이 참여수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시민 참여의 대표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투표참여에는 부적 영향을, 그리고 시민단체 참여에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네 번째 핵심 변수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성별과 연령 요인들이다. 우선, 성별의 관점에서 나타난 기존의 인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사회 참여 활동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 참여 또는 시민 참여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과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참여활동으로 인하여 자원의 불이익을 받았던 역사적 경험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Schlozman, Burns, & Verba, 1994).

그 다음은 연령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인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식은 정부와 공공영역에 나타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더욱 노출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은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참여가 증대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기성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가 주택이나 재산의 소유, 타인과의 이해관계 형성 미흡 등으로 타 연령에 비하여 참여활동을 할 동기가 적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노령이 되면, 오히려 사회적 지위의 하락, 건강 상태의 하락, 은퇴 심리 등으로 인해 참여수준이 다소 낮아지기도 한다. 이것을 바로 생애주기 효과(Life-Cycle Effect)라고 하는데, 연령과 참여활동의 관계는 비례적이기 보다는 일정 시점까지 정비례 관계를 보이다가 기울기의 방향이 바뀌어 감소하는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Verba & Nie, 1972: 138-148). 단, 이러한 가정과 반대로, 다른 효과를 다 통제했을 경우, 연령과 참여 간의 관계를 정비례 관계로 이해해도 된다는 주장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더해서 연령이라는 변수가 시민 참여에 미치는 효과도, 참여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즉, 참여의 유형이 제도적 참여인지 또는 비제도적 참여인지에 따라 연령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령이 낮을수록 전통적인 집회 보다는 대중 집회, 인터넷 토론 등과 같은 비전통적 참여에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김형준, 2004; 박찬욱, 2005).

나. 가치관

전술한 바와 같이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곧 시민 또는 주민 참여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이러한 참여 활동을 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어떠한가에 따라 참여의 활성화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사항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치관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어떤 대상의 대하여 가치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나 관점”으로 정의되며(하동석, 2010), 인지 또는 심리 그 이상의 근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연구들은 가치관을 탈물질주의적 사고, 그리고 시민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탈물질주의적 사고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탈물질주의적 사고는 정치문화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처음 사용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Inglehart(1971)가 산업화 시대의 물질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둔 기성세대가 퇴장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대가 등장하면서 변화해진 정치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활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서구의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의 정치문화가 물질주의적 가치 중심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물질적 가치를 중시 여기는 산업사회가 후기산업사회를 맞이하면서 물질보다는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논리를 설파하기 시작한다(Inglehart, 1990). 이러한 탈물질적인 사고가 시민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는 탈물질주의적 사고를 지닌 사람의 경우, 물질주의자에 비해 자신의 경제적 또는 물질적 안전을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Inglehart(1990)의 주장에 기반을 둔다. 즉, 물질적 풍요로움이 어느 정도만 충족되면,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 또는 정치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경험 연구들에 따르면, 탈물질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사회 참여에 긍정적 의사를 피력하였다(김옥, 이이범, 2006: 111).

다. 심리·정신적 요인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참여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개인의 심리적·정신건강 요소라고 할 수 있다(Milbraith & Goel, 1977). 특히, 어떠한 특정 행위는 바로 개인의 심리적 정보처리의 과정에 기인하기 때문에, 참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효능감과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심리적 요인으로 대변되는 가장 중요 변인 중에 하나는 바로 참여자의 개인의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효능감은 미시간 대학교 서베이 리서치 센터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된 개념으로서, 개인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정의된다. 즉, 개인이 시민적 의무를 수행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감정으로서, 시민 개인은 정치 및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정치효능감인 것이다(Campbell, Gerald, & Warren, 1954: 187). 특히, 정치 효능감은 한 개인이 갖는 정치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결과도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시민 참여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Almond와 Verba(1963), Balch(1974), Verba와 Nie(1972) 등의 다수 연구들이 정치적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¹¹⁾

다음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는 사회 참여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찍이 권구영과 이해자(2002)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이 정신건강 상태에 유의

11)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 효능감을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내적 정치효능감은 참여에 대한 개인의 기술과 지식 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 외적 정치효능감은 개인의 참여에 대한 정치 시스템의 반응성을 의미한다. 즉, 전자는 정치나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하고, 후자는 자신의 참여나 요구에 대하여 정치 시스템 또는 정부가 대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말한다(Yeich & Levine, 1994: 259).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나타난 인터넷 중독이 단순히 정신건강 상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청(소)년층의 개개인이 어떠한 정신상태를 유지하는가에 따라 사회 참여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제도적 차원 요인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곧 시민 참여 또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면, 이러한 참여를 수행하는 주체인 개인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거버넌스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 이외에도 제도적 조건도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또 다른 영향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주요 연구들은 응답자 개인이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구조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인식은 권력구조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또는 누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가의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서 권력구조가 독재적이고 집권화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엘리트주의이며, 권력구조가 다원적이고 분권화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엘리트주의는 일부 시민들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다원주의는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설사 행사한다고 하지 못할지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가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구조의 인식이 시민 자신들과 권력을 지닌 공직자 혹은 지배계급 간의 권력 격차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이 결국 참여와 연결되게 된다. 예컨대, 시민이 정부와의 권력 격차를 크게 느끼는 경우, 시민 참여는 위축이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승중, 김혜정, 2011: 171-172).

제도에 대한 인식 변수 중에 또 다른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이다. 이미 정부 신뢰는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뢰는 최소한 타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자, 최선의 경우 타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신뢰의 종류는 학자들의 시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된다. 예컨대, 신뢰의 대상에 따라 대인신뢰, 사회신뢰, 그리고 정부 신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제도적 구조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정부 신뢰인데, 신뢰라는 개념에 정부를 대입할 경우, 정부기관의 활동이 나에게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신뢰와 거버넌스 간의 실증 연구들을 보면, 관계의 방향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정부 신뢰가 높을수록 참여가 활발하다는 주장인데, 투표나 선거운동과 같은 방식의 참여에서 더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다(유민이, 문상호, 이숙중, 2012; 유재원, 2004; Brehm & Rahn, 1997; Newton, 1999; Vigoda-Gadot & Kapun, 2005). 반면, 정부불신이 참여를 더욱 촉진시킨다는 연구들도 있다. Kaase(1999: 18-19)는 정부 신뢰가 강한 경우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불신이 높을수록 항의와 보이콧과 같은 방식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여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불신이 높을수록 참여가 활발한 경우, 특정 참여 방식 또는 일부 집단에 한해서 나타난다고 보기도 한다(Muller, Jukam, & Selligson, 1982: 253-258). 위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 신뢰는 참여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정부 신뢰나 불신이 극단에 가까울수록 참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의 성과도 시민 참여를 결정짓는 데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변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정책이 시민 참여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주장은 그 동안의 시민 참여 연구의 핵심 변수로 정부정책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민혜와 이승종(2017)은 정부성과가 시민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성과는 제도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비제도적 참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박순애와 박재현(2010), 임준형(2006) 등도 정부성과가 시민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데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적 구조에 대한 인식의 마지막 변수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수요(Perceived Needs)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Jones, Greenberg, Kaufman과 Joseph(1977)는 정부서비스 수요가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정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의 관계에 따라 참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예컨대, 서비스 수요가 높아도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가 있더라도 서비스 수요가 높지 않으면, 참여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Thomas(1982)는 정책서비스 영역을 확장하여, 이에 대한 주관적 수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낄수록 참여활동이 활발해짐을 실증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국내 선행연구로 한정하여 주요 연구들을 살펴볼 경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의 활성화, 이른바 시민 참여 연구는 거버넌스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를 존재하지 않았다. 시민 참여, 즉 청(소)년 참여로 범위를 좁힐 경우, 규범적 수준에서 그 당위성을 제시하는 수준이거나, 또는 단일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심리적 변수들을 활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성호(2006)는 정책과정에서의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청소년위원회의 조직구성과 활동 내용을 상세히 비교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청소년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수동적인 반응자가 아닌 능동적인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규범적 수준의 문제 제기를 시도하였다.

모경환 외(2010)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민 의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의 올바른 시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이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높은 기대수준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긍정적 의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윤주(2017)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천구 청소년의회 사례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시민역량의 의미를 재탐색하였다. 그리고 시민역량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정치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금주(2017)는 현재 청소년 참여 기구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참여기구의 역사적 배경과 흐름을 살펴보고, 주요 행위자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청소년 참여기구는 일정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사회 참여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청소년 참여기구에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 강화, 학급회의와 학교회의와의 연계,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전술한 연구들이 사례연구 또는 질적인 측면의 연구들이라면, 이창호와 모상현(2012)은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그는 탈물질주의 가치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사회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탈물질주의 가치는 청소년의 기부행위, 서명운동, 특정제품 불매운동과 같은 사회·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소셜미디어 사용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달라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들을 정리하면, 우선 이 연구보고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거버넌스 활성화, 즉 참여 활성화에 있어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기존 연구들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들이 분석 대상을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어,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계량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는 거의 전무한 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실증조사분석

1) 연구설계

(1) 자료의 특성 및 설명

앞서 전술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존의 거버넌스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 층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하고, 이러한 거버넌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의 효과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탐색적 연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가 거버넌스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해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청(소)년 관련 주요 지표들은 큰 진전이 보이고 있지 않다. 즉,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좀 더 근원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 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해당 조사를 추진하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설문이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를 조사한 만큼 조사의 대상도 역시 청(소)년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39세 중 2,714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해당 조사에 활용된 설문지를 살펴보면, 설문지는 청년 그리고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몇 가지 질문을 제외하면 모든 질문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 조사 영역은 인구와 가족이다. 인구와 가족 영역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몇 세부터 가족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는지, 출산율이 현재와 비교하여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영역은 교육 및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들이다. 해당 영역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입시경쟁, 그리고 교육의 관행 등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하는지, 한국사회에서 학벌은 중요한지에 등에 대한 답변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영역은 경제이다. 경제영역은 청(소)년들과 가장 밀접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관련 질문들 모두는 현재 청소년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의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의 적절 수준은 얼마 만큼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재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현재 비교육 미취업 기간은 어느 정도 됐는가를 파악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영역은 주거이다. 주거영역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주거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영역에 대한 질문의 구성은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는지,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하는지,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당한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 영역은 건강이다. 심리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는 건강 상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건강 상태는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질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상태에 대한 주요 질문들을 보면, 지난 2주간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기분을 갖고 있었는지, 운동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지, 성형수술은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문하였다.

여섯 번째 영역은 가치관이다. 가치관은 개인의 삶의 방향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들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질문의 경우, 일과 여가 사이에서 당신이 선호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당신이 선호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곱 번째 영역은 관계와 참여이다. 관계와 참여는 청(소)년 세대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최근 주요 조사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당 설문에서 관계와 참여는 현재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방식을 어떠한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영역은 사회적 관계이다. 사회적 관계는 최근 자발적 외톨이가 증가하는 청(소)년 세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예컨대, 평상시 얼마나 자주 외출하는지, 밥을 누구와 먹는지, 술은 누구와 마시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2) 변수 선정 및 측정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거버넌스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단,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탈물질주의, 교육의 인식, 주거의 인식, 기성세대의 인식 등 총 6가지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독립변수

가. 탈물질주의

거버넌스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주체인 청(소)년들의 참여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로서 이 연구는 첫 번째로 탈물질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대변되는 탈물질주의는 보통 물질주의 반대말로 활용되곤 한다. 청(소)년이 갖고 있는 탈물질주의가 거버넌스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어 있다. 예컨대, 안명규와 류정호(2007)는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터넷을 수단으로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이유를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인지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쳤으나, 행위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김육과 이이범(2006)도 2000~2001년 실시된 세계가치관을 토대로 국내의 정치참여 실태를 분석결과에 따르면,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지닌 사람일수록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들도 이러한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참여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Cantijoch와 Martin(2009)은 세계가치관 조사를 활용하여 스페인의 정치참여를 분석한 결과,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비관습적인 정치 참여(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박희봉과 이희창(2006)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탈물질주의적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20대와 30대가 40대에 비해 탈물질주의적 성향이 높게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보릿고개, 해외 원조와 같은 물질적 빈곤에 허덕였던 해방 이후 세대와 달리, 80~90년대에 태어나 물질적 혜택을 많은 20대와 30대는 다양한 가치와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박재홍과 강수택(2012)의 연구에 나와 있듯이 젊은 세대가 탈물질주의적 가치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과학기술의 변화, 교육의 변화에 따라, 젊은 세대 내에서도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성향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박재홍, 강수택, 2012). 또한, 탈물질주의적 성향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대별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어떠한 직업적 상태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분이 안정되고, 일정한 임금을 받고 있는 정규직 상태에 있는 행위자들은 탈물질주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반해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의 탈물질주의 성향이 그리 높지 않아 거버넌스 활성화와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가치관이라는 영역에서 이러한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대한 측정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총 4개의 문항 중에서 3개 문항인 ① 일 중시 vs 여가 중시, ②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③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문항이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보여준다고 판단하고 이를 요인화하여 탈물질주의라는 하나의 변수로 요인화하였다.

나. 제도에 대한 인식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두 개의 범주는 개인 차원의 요인과 제도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제도적 요인으로 활용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충분한 조직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의 여부 등이 핵심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청(소)년의 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수준의 직접적 효과를 계량화하여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수준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각각의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구조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적 구조의 변수는 교육과 주거 영역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정부 성과에 대한 반응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그 중에서도 교육과 주거에 대한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데 있어 교육과 주거는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인식의 수준과 참여간의 관계는 이미 주요 연구들에서 경험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예컨대, 정부성과와 시민 참여 간의 관계를 연구한 김민혜와 이승종(2017)에 따르면, 정부성과는 시민 참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성과는 직접적인 시민 참여라고 할 수 있는 선거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직접적인 시민 참여가 아닌 비선거적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진 시민들은 정부성과가 높을수록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Benito와 Bastida(2009)도 정부성과와 거버넌스 활성화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나 파악하였다. 전 세계 41개 국가를 대상으로 높은 재정투명성을 유지

하고 있는 국가에서 투표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흐름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적 투명성이 높다고 인식하거나, 또는 실제로 높다고 보고될 경우, 시민들의 투표율은 더욱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육과 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것이 거버넌스 활성화에 주는 영향은 집단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을 연령대 별로 구분하자면, 15~18세, 19~29세, 30~39세 등 총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15~18세는 주거 영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현재 제도권 교육의 구조, 학벌 등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30~39세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세대라는 점에서, 15~18세가 교육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는 달리, 주거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각 집단별로 정책성과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곧 그것이 거버넌스 활성화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연구는 제도적 인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과 주거에 대한 요인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인식도 거버넌스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자료의 구조적 한계상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를 찾는 데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 해당 변수만을 활용하였다. 우선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수는 우리 사회의 교육 관행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대질문으로 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세 가지로 하였다. 예컨대,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등으로 하였다. 이러한 문항의 구성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으로, 리커트 5점 척도에 기반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설문 문항은 요인화하여 교육에 대한 인식 변수로 구체화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거에 대한 인식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질문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교육과 동일하게 응답의 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여기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문항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주거에 대한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문항이라고 정의하고, 이 두 문항을 요인화하여 주거에 대한 인식이라는 변수로 만들었다. 단,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질문의 방향을 부정적 인식의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 두 번째 문항을 역코딩하여 요인화하였다.

다. 기성세대에 대한 인식

최근 들어 세대 간 갈등은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사회문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의 이러한 세대간 갈등이 심각한 이유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교육 수준의 급상승으로 급속한 사회변동이 나타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연령대 간 경험과 사고방식의 괴리가 세대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은 단순히 문화적 충돌에서 벗어나 고용과 연금, 복지, 정치적 시각 등을 둘러싸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 확대되고 있다.

세대 간 갈등은 굳이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영국의 유럽 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 사례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 EU 잔류 의향이 강했던 청년층과, 탈퇴 의견이 우세했었던 노년층 간의

갈등이 발생했고, 상당수 청년은 EU 탈퇴 결정의 영향을 가장 오래 받게 되는 그들의 미래를 고령자들이 결정해 버렸다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단, 정치향의 사회적·심리적 조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세대 간 갈등 또는 인식의 차이가 단지 부정적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갈등과 인식의 차이가 청년층 또는 기성세대에게 사회문제 및 정치문제를 환기시키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참여를 활발하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연구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기성세대에 대해 가지는 불만이 높을수록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버넌스와 같은 사회적 참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청년층의 불만이 거버넌스 활성화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특정 세대의 청년층은 기성세대의 인식이 사회문제에 대한 자각을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특정 세대의 청년층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수록 기성세대에 대한 회의감 또는 사회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거버넌스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집단별로 기성세대에 대한 인식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청년층이 갖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의 인식을 변수로 활용하고자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조사한 문항을 활용한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40~50대와 그리고 7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응답자들에게 총 7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문항은 총 3가지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7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문항은 총 4가지로,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질문에 대답도 전술한 항목과 동일하게, 리커트 5점 척도에 기반을 두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고, 관련 있는 변수만을 대상으로 요인화하여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 인식 변수로 구성하였다.

라. 정치적 효능감

네 번째 독립변수는 정치적 효능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 효능감은 최근 정부 신뢰, 사회 참여 등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학자들에게 매력적인 개념으로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치적 효능감은 한 개인이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능력 혹은 역량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물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효능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 예컨대, 학력의 수준, 신분의 안전성 등의 여부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정치적 효능감이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대리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자원과 별개로, 자신의 심리적 상태 혹은 의식에 따라 정치적 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의 청(소)년층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경제·사회적으로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으나, 2008년 광우병을 계기로 촉발된 촛불 시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촛불 시위 경험은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하나의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 시설과, 스마트폰 보급과 같은 수단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항의를 표시할 경우 사회의 문제가 바뀔 수 있다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오게

만들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항의 표시, 집회 참가와 같은 요소들은 적을 수 있으나,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활동의 수준은 매우 활발하다는 주장은 전술한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과 별개로 종속변수가 어떠한 것이 됐건, 대다수의 연구에서 정치적 효능감은 해당 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사회 참여가 높아지거나, 투표율이 올라가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단, 청년층의 정치적 효능감이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효과는 집단별로 상이할 수 있다. 예컨대, 낮은 학력수준 또는 저임금을 받는 집단들은 정치적 효능감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떨어져, 거버넌스 활성화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거버넌스라는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식의 수준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효능감 또한 집단별로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러한 논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가설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층이 갖고 있는 정치효능감이라는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측정한 정치효능감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정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세 가지 문항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반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질문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의 범위로 구성되어 있다.

마. 정신건강

이 연구는 거버넌스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변수로서, 응답자의 정신건강에 주목하고자 한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기술적 변화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불확실성, 불안정성, 그리고 단절감 등과 같은 느낌을 조성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정체성의 위기, 혹은 역할 혼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비인간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각종 정서·행동적 부적응 상태에 빠지게 될 공산이 크다.

특히, 정서적 불안전성, 정체성 혼란, 정신적 건강의 상태가 나빠지게 될 경우, 단순히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오래되기는 했지만, 과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역학 조사 연구에서 우리나라 15~24세 청소년기 집단의 경증이상 우울증 발생률이 21%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중증 이상의 우울 증세를 보이는 청소년이 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정자, 조맹제, 최은진, 1996).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건강한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한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혹은 정치적인 주요 이슈에 대해 합리적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구자경, 2004).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층의 정신건강 상태가 거버넌스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건강 영역에서 조사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지난 2주간 어떠한 일상생활을 보냈는가에 대한 대질문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총 다섯 가지의 질문을 응답자에게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문항을 요인화하였고, 정신건강이라는 변수로 상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②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거버넌스의 활성화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활성화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개념적 특성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곧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개념적 가정에 기반하여, 거버넌스를 참여라는 개념으로서 조작화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는 참여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참여라는 개념은 관습적인 형태의 참여, 혹은 공식적인 참여라는 속성과 함께 비관습적이며, 비공식적인 형태의 참여로 구분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자가 오늘날의 맥락에서, 투표, 위원회 등과 같은 오프라인 형태의 참여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인터넷 게시판, 사이버 조직의 참여와 같은 온라인 형태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참여적 수준을 고려하여 직접참여 거버넌스, 그리고 간접참여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 보고서는 참여라는 개념을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잘못되었고 생각하는 일에 어떻게 참여하겠는가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는 대질문 아래, 총 다섯 가지의 세부 문항을 구성하여 응답자들에 질문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서명에 참여하기,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항의 전화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술한 항목과 동일하게, 리커트 5점 척도에 기반을 두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표 III-2 변수의 목록

구분	변수		설문문항
독립 변수	탈물질주의		Q54-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Q54-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Q54-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교육인식		Q14-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Q14-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Q14-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주거인식		Q44-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Q44-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기성세대 인식		Q58-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Q58-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Q58-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정치적 효능감		Q60-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Q60-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Q60-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신건강		Q50-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Q50-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Q50-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Q50-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Q50-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종속 변수	참여 (거버넌스)	간접 참여	Q59-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Q59-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Q59-3)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직접 참여	Q59-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Q59-5) 항의 전화하기

(3) 변수의 요인화

앞서, 거버넌스 활성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총 6가지 변수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는 해당 변수의 요인화와 그것이 통계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III-3 요인분석 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평균	Hotlling
Q14-1	.006	.038	.719	.005	.069	.001	-.171	3.456	1347.7
Q14-2	-.007	.052	.894	.076	-.037	-.007	.107		
Q14-3	-.013	.064	.869	.058	-.037	-.010	.161		
Q44-2	-.091	-.016	-.089	.066	-.087	-.024	.821	3.425	1133.2
Q44-3	-.015	.034	.205	-.092	.239	.042	.472		
Q58-2	.017	.060	.015	.005	.776	.006	-.101		
Q58-3	-.066	.041	-.034	-.026	.773	.044	-.002	2.950	227.7
Q58-7	-.059	-.031	.021	.076	.529	.083	.279		
Q60-1	.038	.187	.052	.816	.034	-.010	.070		
Q60-2	.012	.109	.036	.845	-.073	.052	-.021	3.210	263.7
Q60-3	.072	.228	.042	.782	.084	-.013	-.049		
Q50-1	.857	.065	-.007	.035	-.084	-.010	.030		
Q50-2	.850	-.018	-.013	.043	-.070	.018	.009	2.704	1094.5
Q50-3	.878	.028	-.013	.030	-.033	.016	.011		
Q50-4	.780	-.033	-.019	-.011	-.010	.018	-.113		
Q50-5	.822	-.038	.039	.036	.066	.079	-.073		
Q54-1	.022	.000	.063	-.003	.022	.577	.226	3.551	1111.6
Q54-2	.000	.076	-.026	.032	.084	.765	-.099		
Q54-3	.073	.057	-.050	-.001	.019	.765	-.080		
Q59-1	.032	.761	.070	.111	-.012	-.006	.002	2.746	984.7
Q59-2	.023	.834	.041	.093	.004	.033	.028		
Q59-3	-.042	.812	.030	.187	-.011	.055	.059		
Q59-4	.008	.783	.031	.143	.059	.088	-.047		
Q59-5	-.023	.723	.002	.032	.053	.004	-.025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대부분의 설문 응답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개념화하고, 실제 변수로 만들기 위해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고, 주성분분석 중 직교회전방식인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식인 KMO(Kaiser-Mayer-Olkin) 방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 KMO 측도값이 0.797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arrlett 구형성 검정(Test of Sphericity)의 근사값이 22211.402 이고, 유의수준이 $p < .001$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들이 요인분석에 사용에 적합하였다. 요인추출방식은 각 요인의 기존 변수의 정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고유값(Eigen-Value)dmf 이용하여, 고유값이 1.00이상인 요인에 한정하였는데, 고유값의 누적율은 63.679%로 나타났다.¹²⁾

(4)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는 거버넌스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 참여자들의 어떠한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통계적 검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가 승인통계를 받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증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적 가정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연구는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독립변인의 효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개별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한 모형 비교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의 분석 모형은 <그림 III-1>과 같다.

12)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 적재값이 낮거나, 응집력이 떨어지는 문항은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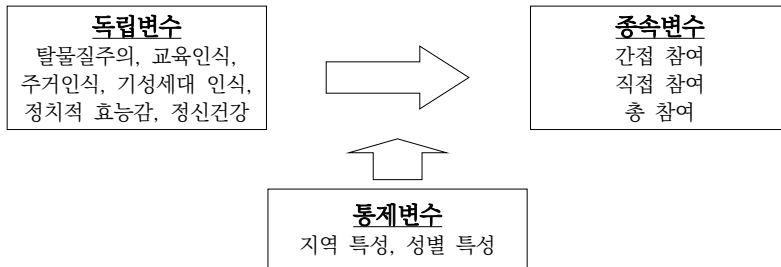


그림 Ⅲ-1 연구 모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회귀분석을 시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는 총참여, 간접참여, 그리고 직접참여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각 집단별로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에 활용하는 변수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종속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종속변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총참여,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참여, 그리고 마지막은 직접참여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연구의 설문 응답은 탈물질주의를 제외하고는 1로 시작하여 5로 끝나는 리커트 5점 척도라는 점에서, 응답의 최소값은 1이 되며, 응답의 최대값은 5가 된다. 먼저, 총참여의 수준은 2.7461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0.8460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종속변수 중에 하나인 간접참여는 평균이 2.9175이고, 표준편차는 0.9335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

고 마지막 종속변수인 직접참여는 평균이 2.4889이고, 표준편차는 0.9279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직접참여를 전제로 하는 거버넌스 보다는 간접참여를 전제로 하는 거버넌스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탈물질주의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7로 나타나며, 숫자가 커질수록 탈물질주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탈물질주의의 평균값은 3.5512이며, 표준편차는 1.0520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인식 변수를 살펴보면, 교육의 인식 변수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7이다. 여기서 숫자가 커질수록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숫자가 커진다는 것은 현재 응답자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 수준의 평균값은 3.4559이며, 표준편차는 0.91273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의 인식 변수를 살펴보면, 주거의 인식변수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거의 인식에 대한 응답점수가 높아질수록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에 대한 불만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주거 인식 변수의 평균은 3.4254이며, 표준편차는 0.7312로 나타났다. 기성세대 인식 변수를 살펴보면, 기성세대의 인식변수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현재 청(소)년층이 기성세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평균은 2.9503, 표준편차는 0.6138로, 현재의 청(소)년층이 기성세대에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치효능감 변수를 살펴보면, 정치효능감 변수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이다. 여기서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 자신이 정치적 역량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효능감 변수의 평균은 3.2101이며, 표준편차는 0.7124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 변수를 보면, 정신건강 변수의 최소값은 0이며, 최대값은 5이다. 여기서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응답자의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이 대답한 값의 평균은 2.7041이며, 표준편차는 1.0524이다.

표 III-4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간접참여	1.00	5.00	2.9175	0.9335
직접참여	1.00	5.00	2.4889	0.9279
총참여	1.00	5.00	2.7461	0.8460
탈물질주의	1.00	7.00	3.5512	1.0520
교육인식	1.00	5.00	3.4559	0.9127
주거인식	1.00	5.00	3.4254	0.7312
기성세대 인식	1.00	5.00	2.9503	0.6138
정치적 효능감	1.00	5.00	3.2101	0.7124
정신건강	0.00	5.00	2.7041	1.0524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화와 어떠한 통계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회귀분석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았다.

먼저, 교육인식의 변수는 세 개의 종속변수인 간접참여($r = 0.12, p = 0.000$), 직접참여($r = 0.08, p = 0.000$), 그리고 총참여($r = 0.11, p = 0.000$)와 통계적으로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인식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주거인식 변수는 세 개의 종속변수인 간접참여($r = 0.02, p = 0.357$), 직접참여($r = 0.01, p = 0.734$), 그리고 총참여($r = 0.02, p = 0.448$)와 모두 유의미한 통계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인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꼭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탈물질주의 변수는 세 개의 종속변수인 간접참여($r = 0.09, p = 0.000$), 직접참여($r = 0.10, p = 0.000$), 그리고 총참여($r = 0.11, p = 0.000$)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탈물질주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III-5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교육 인식	주거 인식	탈물질 주의	기성 세대	정치 효능감	정신 건강	간접 참여	직접 참여	총참여
교육 인식	1								
주거 인식	0.10*** (0.000)	1							
탈물질 주의	-0.07 (0.702)	0.20 (0.309)	1						
기성 세대	0.02 (0.308)	0.10*** (0.000)	0.12 (0.702)	1					
정치 효능감	0.11*** (0.000)	0.01 (0.54)	0.04* (0.034)	0.03 (0.080)	1				
정신 건강	-0.01 (0.733)	-0.10*** (0.000)	0.07*** (0.000)	-0.08*** (0.000)	0.08*** (0.000)	1			
간접 참여	0.12*** (0.000)	0.02 (0.357)	0.09*** (0.000)	0.05* (0.013)	0.34*** (0.000)	0.01 (0.706)	1		
직접 참여	0.08*** (0.000)	0.01 (0.734)	0.10*** (0.000)	0.08*** (0.000)	0.28*** (0.000)	-0.00 (0.975)	0.64*** (0.000)	1	
총참여	0.11*** (0.000)	0.02 (0.448)	0.11*** (0.000)	0.07** (0.001)	0.35*** (0.000)	0.01 (0.813)	0.94*** (0.000)	0.86*** (0.000)	1

* 주: * $p < .05$, ** $p < .01$, *** $p < .001$.

네 번째, 기성세대 변수는 세 가지 종속변수인 간접참여($r = 0.05$, $p = 0.013$), 직접참여($r = 0.08$, $p = 0.000$), 그리고 총참여($r = 0.07$, $p = 0.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정치 효능감 변수는 세 가지 종속변수인 간접참여($r = 0.34$, $p = 0.000$), 직접 참여($r = 0.28$, $p = 0.000$), 그리고 총참여($r = 0.35$, $p = 0.000$)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효능감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정신 건강 변수는 세 가지 종속변수인 간접참여($r = 0.01$, $p = 0.706$), 직접참여($r = -0.00$, $p = 0.975$), 그리고 총참여($r = 0.01$, $p = 0.813$)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계수의 방향도 일치되지 않았다. 이것은 정신건강 수준이 양호하다고 해서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참여 수준에 대한 집단별 평균 비교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하게 앞서,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집단별 차이, 즉 집단에 따른 참여수준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집단의 경우 T 검정을 수행하며, 세 집단 이상의 경우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간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참여의 수준이 직접참여보다는 간접참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성별에 따른 참여 수준을 살펴보면, <표 III-6>에 나와 있듯이, 세 가지 참여 수준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세 가지 참여에서 모두 여자가 참여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간접참여의 경우, 남자의 참여 평균은 2.80이었으며, 여자의 참여 평균은 3.04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었다. 직접참여의 경우, 남자의 참여 평균은 2.46이었으며, 여자의 참여 평균은 2.52로 미세하게 여자가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전술한 간접참여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총참여 수준을 살펴보면, 남자의 참여 평균은 2.67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의 참여 평균은 2.84로서, 간접참여, 직접참여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평균적으로 높은 참여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0.001 수준에서 강한 유의미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Ⅲ-6 성별에 따른 참여수준 평균 비교 및 검정

구분	간접참여			직접참여			총참여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남자	2.80	0.93	0.00	2.46	0.92	0.06	2.67	0.85	0.00
여자	3.04	0.91		2.52	0.93		2.84	0.83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참여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먼저 청(소)년의 연령을 세 단계(15~18세, 19~29세, 30~39세)로 구분하였다.

우선 15~18세의 참여 수준을 보면, 15~18세의 참여수준이 19~29세, 그리고 30~39세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에 반해, 직접참여의 경우, 평균의 차이가 있으나 그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총참여의 경우를 보면, 직접참여와 비슷하게, 15~18세의 참여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19~29세, 그리고 30~39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Ⅲ-7 연령에 따른 참여수준 평균 비교 및 검정

구분	간접참여			직접참여			총참여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15-18	3.07	0.97	0.00	2.58	0.96	0.61	2.87	0.87	0.02
19-29	2.93	0.95		2.44	0.93		2.74	0.86	
30-39	2.92	0.89		2.51	0.91		2.71	0.82	

참여수준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통계적 차이검증을 시도한 결과, 간접참여에서는 평균이 제일 높은 지역이 광주/전라/제주였고, 그 다음은 대구/경북, 그리고 부산/울산/경남 수준이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살고 있는 수도권외의 경우, 참여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성이 높은 0.001수준 이하로 나타나고 있었다. 직접참여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간접참여에 비해 평균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총참여의 경우를 살펴보면, 간접참여와 유사하게, 광주/전라/제주의 참여수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 다음은 대구/경북, 그리고 부산/울산/경남 순이었다. 또한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III-8 지역별에 따른 참여수준 평균 비교 및 검정

구분	간접참여			직접참여			총참여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서울	2.75	0.97	0.000	2.51	0.98	0.462	2.65	0.89	0.000
인천/경기	2.83	0.95		2.48	0.96		2.69	0.87	
대전/충청 세종/강원	2.69	0.94		2.38	0.91		2.57	0.86	
광주/전라 /제주	3.32	0.77		2.76	0.83		3.10	0.71	
부산/울산 /경남	3.00	0.93		2.42	0.85		2.77	0.81	
대구/경북	3.06	0.80		2.41	0.91		2.80	0.75	

응답자의 신분, 즉 직업적 신분에 따른 참여의 수준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간의 참여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균차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간의 참여수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그것이 통계적으로 모든 참여 유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간접참여의 경우, 유의수준이 0.41로 나타났으며, 직접참여도 0.42, 그리고 총참여는 0.49 등, 통계적 유의수준을 한참 웃돌고 있었다.

표 III-9 종사상 지위(임금 vs 비임금)에 따른 참여수준 평균 비교 및 검정

구분	간접참여			직접참여			총참여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임금	2.86	0.91	0.41	2.45	0.91	0.42	2.69	0.83	0.49
비임금	2.80	0.97		2.41	0.89		2.64	0.88	

이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참여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평균차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간접참여와 총 참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참여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10 종사상 지위(정규직 vs 비정규직)에 따른 참여수준 평균 비교 및 검정

구분	간접참여			직접참여			총참여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정규직	2.81	0.90	0.002	2.44	0.90	0.247	2.66	0.82	0.011
비정규직	2.98	0.95		2.50	0.94		2.79	0.86	

(3) 회귀분석

종속변수인 간접참여, 직접참여, 총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였다.

우선 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적인 모델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핵심적인 독립변인들은 종속변수의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그 효과의 유의미성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탈물질주의 변수의 효과의 경우를 살펴보면, 모든 종속변수의 유형에서 탈물질주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방향도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응답자가 개인의 성향이 탈물질주의에 가깝다고 응답할수록

참여에 대한 의사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응답자 개인이 탈물줄주의 가치관에 더 가까울수록 거버넌스의 활성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표 III-11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회귀모델

구분	간접참여		직접참여		총참여	
	β	t	β	t	β	t
탈물줄주의	0.083**	5.351	0.076**	4.630	0.080**	5.641
교육인식	0.075**	4.224	0.049**	2.607	0.065**	3.972
주거인식	0.033	1.428	-0.011	-0.447	0.015	0.733
기성세대 인식	0.083**	3.074	0.115**	4.051	0.096**	3.879
정치효능감	0.437**	19.063	0.359**	14.951	0.405**	19.388
정신건강	0.003	0.197	-0.013	-0.808	-0.003	-0.242
더미변수	경기/인천	0.184**	3.680	0.041	0.777	0.126**
	대전/충청/세종/강원	0.060	1.050	-0.061	-1.029	0.011**
	광주/전라/제주	0.724**	12.350	0.362**	5.892	0.579**
	부산/울산/경남	0.344**	6.128	-0.040	-0.675	0.191**
	대구/경북	0.405**	6.983	-0.040	-0.650	0.227**
	여자	0.244**	7.558	0.068*	2.000	0.174**
Durbin-Watson		1.715	1.715		1.691	
R^2		0.450	0.338		0.437	
Adjusted R^2		0.203	0.114		0.191	
F		57.252	29.051		53.072	

* 주: * $p < .05$, ** $p < .01$.

교육인식에 대한 변수를 살펴보면, 교육인식 변수도 종속변수의 유형에 상관없이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향도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해당 문제를 개선하고 의견을 제시하려는 참여 활동의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할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주거에 대한 인식의 변수를 살펴보면, 전술한 두 개의 변수와 달리 주거에 대한

인식 변수는 종속변수의 유형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계수의 방향도 서로 방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은 주거와 참여 수준 간에는 어떠한 인과적 관계를 확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기성세대 인식의 변수를 살펴보면, 기성세대의 인식변수는 세 개의 종속변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계수의 방향도 긍정적이었다. 즉,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할수록 참여의 수준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성세대의 부정적 인식이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효능감의 변수를 살펴보면, 정치적 효능감의 변수도 기성세대의 인식변수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종속변수 유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향도 긍정적이었다. 즉, 응답자 개개인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건강 변수를 살펴보면, 세 가지 모델 모두에서 정신건강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그 계수의 방향도 서로 일치되지 않았다. 즉, 정신건강의 상태가 양호할수록(또는 긍정적일수록) 그것이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확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거버넌스 활성화에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연령별로 거버넌스 활성화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령대의 구분은 15~18세, 19~29세, 그리고 30~39세로 구분하였다. <표 III-12>에 제시되어 있듯이, 종속변수와 연령대의 유형에 따라 거버넌스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 -12 연령별에 따른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회귀 분석

구분	간접참여			직접참여			총참여		
	15~18	19~29	30~39	15~18	19~29	30~39	15~18	19~29	30~39
탈물질주의	0.056 (1.226)	0.077** (3.288)	0.074** (3.130)	0.072 (1.557)	0.073** (2.960)	0.068** (2.725)	0.062 (1.552)	0.075** (3.524)	0.072** (3.270)
교육인식	0.015 (0.326)	0.081** (2.968)	0.091** (3.331)	-0.040 (-0.851)	0.060* (2.056)	0.065* (2.261)	-0.007 (-0.170)	0.073** (2.895)	0.081** (3.188)
주거인식	-0.014 (-0.209)	0.010 (0.295)	0.090** (2.681)	-0.102 (-1.468)	0.036 (0.970)	-0.012 (-0.336)	-0.049 (-0.819)	0.020 (0.643)	0.049 (1.581)
기성세대 인식	0.081 (1.063)	0.022 (0.544)	0.142** (3.454)	0.116 (1.497)	0.071* (1.679)	0.154** (3.535)	0.095 (1.413)	0.042 (1.134)	0.147** (3.850)
정치효능감	0.449** (7.426)	0.477** (13.864)	0.439** (12.056)	0.492** (8.006)	0.356** (9.730)	0.341** (8.841)	0.466** (8.743)	0.428** (13.585)	0.400** (11.840)
정신건강	-0.067 (-1.458)	-0.012 (-0.523)	0.004 (0.187)	-0.079 (-1.696)	-0.013 (-0.546)	-0.006 (-0.240)	-0.071 (-1.774)	-0.013 (-0.596)	0.000 (0.012)
더미변수	경기/인천	0.149 (1.057)	0.124 (1.638)	0.249** (3.386)	-0.224 (-1.566)	0.093 (1.150)	0.069 (0.880)	0.000 (-0.002)	0.112 (1.606)
	대전/충청/세종/강원	-0.153 (-0.956)	-0.002 (-0.025)	0.206* (2.405)	-0.323 (-1.989)	0.029 (0.316)	-0.063 (-0.696)	-0.221 (-1.567)	0.010 (0.131)
	광주/전라/제주	0.764** (4.937)	0.704** (7.888)	0.690** (7.782)	0.144 (0.917)	0.454** (4.758)	0.319** (3.397)	0.516** (3.783)	0.604** (7.380)
	부산/울산/경남	0.400** (2.504)	0.308** (3.591)	0.359** (4.336)	0.036 (0.221)	0.020 (0.223)	-0.139 (-1.581)	0.255 (1.806)	0.193* (2.453)
	대구/경북	0.380* (2.317)	0.351** (4.148)	0.424** (4.702)	-0.157 (-0.944)	-0.024 (-0.269)	-0.036 (-0.377)	0.165 (1.143)	0.201** (2.590)
	여자	0.269** (3.126)	0.307** (6.253)	0.176** (3.576)	0.035 (0.399)	0.126* (2.411)	0.020 (0.375)	0.176** (2.312)	0.234** (5.210)
	Durbin-Watson	1.626	1.859	1.893	1.743	1.826	1.839	1.636	1.827
	R^2	0.219	0.246	0.190	0.177	0.126	0.108	0.235	0.226
	Adjusted R^2	0.196	0.238	0.181	0.153	0.116	0.099	0.212	0.217
	F	9.571	30.907	22.018	7.322	13.600	11.444	10.446	19.696

* 주: 1) 표 안의 수치는 회귀계수 값이며, 가로 안의 값은 t 값임.

2) * $p < .05.$, ** $p < .01.$

우선, 탈물질주의 경우 15~18세 집단은 세 가지 종속변수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19~29세, 30~39세에서의 탈물질주의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계수의 방향도 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은 19~29세, 그리고

30~39세에서 탈물질주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교육 인식의 경우, 15~18세의 집단은 세 가지 유형의 종속변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19~29세, 그리고 30~39세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이들 집단에서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할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거 인식의 경우를 보면, 30~39세 집단에서 주거인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할수록 간접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통계적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성세대 인식의 경우를 보면, 기성세대 인식 변수는 간접참여의 경우 30~39세 집단, 직접참여의 경우, 19~29세와 30~39세, 그리고 총참여의 경우 30~39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그 계수의 방향성 모두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이 세 가지의 집단에서 기성세대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할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정치적 효능감의 경우, 집단의 유형에 관계없이, 그리고 종속변수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었으며, 그 계수의 방향도 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즉, 정치적 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정신건강 변수를 살펴보면, 집단의 유형과 관계없이, 또한 참여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각각의 계수 방향도 일치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정신건강의 상태가 양호할수록 혹은 좋아질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종사자의 지위에 따른 거버넌스 활성화 수준의 효과를 크게 임금과 비임금 집단 간의 차이,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13>는 임금과 비임금 근로자 간의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독립변인

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우선 탈물질주의 변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세 가지 종속변수 유형 모두에서, 비임금 근로자 보다는 임금 근로자에서 탈물질주의 변인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계수의 방향도 모두 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즉, 임금 근로자의 경우 탈물질주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통계적 결과가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인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거버넌스 활성화에 어떠한 통계적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만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거버넌스 활성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 근로자 집단에서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할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주거인식 변수가 세 가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참여의 유형에 관계없이, 집단의 유형에 상관없이 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확정하기 어려웠다. 다시 말해, 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할수록 그것이 거버넌스 활성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대한 인식 변수를 보면, 우선, 간접 참여에서 임금 근로자에서만 기성세대 인식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임금 근로자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할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통계적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간접참여에서 나타난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통계적 효과는 직접참여, 그리고 총참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비임금 근로자 보다는 임금 근로자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3 집단 간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회귀 분석 비교(임금 vs 비임금)

구분		간접참여		직접참여		총참여	
		임금	비임금	임금	비임금	임금	비임금
탈물질주의		0.062** (2.988)	0.071 (1.312)	0.055* (2.505)	0.066 (1.290)	0.059** (3.095)	0.069 (1.395)
교육인식		0.088** (3.588)	0.029 (0.452)	0.077** (2.979)	0.045 (0.747)	0.083** (3.704)	0.035 (0.604)
주거인식		.040 (1.324)	0.063 (0.751)	0.008 (0.254)	-0.013 (-0.165)	0.028 (0.978)	0.033 (0.425)
기성세대 인식		0.116** (3.235)	-0.126 (-1.264)	0.131** (3.452)	0.030 (0.321)	0.122** (3.691)	-0.064 (-0.697)
정치효능감		0.449** (14.244)	0.478** (5.710)	0.345** (10.333)	0.302** (3.804)	0.407** (14.107)	0.408** (5.322)
정신건강		0.001 (0.032)	-0.093 (-1.600)	0.015 (0.654)	-0.134* (-2.428)	0.006 (0.321)	-0.109* (-2.055)
더미변수	경기/인천	0.206** (3.100)	0.381* (2.238)	0.109 (1.549)	0.337* (2.094)	0.167** (2.729)	0.363* (2.335)
	대전/충청/세종/강원	0.123 (1.683)	0.323 (1.404)	0.042 (0.547)	0.182 (0.834)	0.090 (1.347)	0.267 (1.266)
	광주/전라/제주	0.711** (9.047)	0.835** (3.848)	0.445** (5.358)	0.692* (3.370)	0.605** (8.349)	0.788** (3.921)
	부산/울산/경남	0.427** (5.701)	0.447** (2.384)	0.047 (0.592)	-0.012 (-0.070)	0.275** (3.983)	0.263 (1.536)
	대구/경북	0.417** (5.297)	0.257 (1.136)	0.043 (0.514)	-0.012 (-0.056)	0.268** (3.684)	0.149 (0.722)
	여자	0.234** (5.297)	0.139 (1.124)	0.005 (0.116)	-0.024 (-0.209)	0.142** (3.502)	0.074 (0.651)
Durbin-Watson		1.660	2.167	1.737	2.182	1.666	2.193
R^2		0.214	0.199	0.113	0.156	0.196	0.190
Adjusted R^2		0.208	0.156	0.106	0.110	0.189	0.146
F		32.240	4.608	15.128	3.407	28.737	4.336

* 주: 1) 표 안의 수치는 회귀계수 값이며, 가로 안의 값은 t 값임.

2) * $p < .05$., ** $p < .01$.

정치효능감 변수를 살펴보면, 정치적 효능감 변수는 임금과 비임금, 그리고 종속변수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각각의 모델에서 도출된 계수의 방향도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

다. 이는 정치적 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신건강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의 변수는 이전의 집단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르게, 일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직접참여의 비임금 근로자의 모델에서 정신건강의 수준이 양호해질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참여의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신건강의 상태가 양호할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거버넌스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효과와 관련하여 탈물질주의 변수의 경우, 세 모델 모두에서 탈물질주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집단은 정규직이었다. 즉, 정규직에서 탈물질주의 인식이 증가할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인식도 탈물질주의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각각 모델에서 나타난 계수의 방향 모두도 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즉, 정규직에서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적 결과도 도출된 것이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은 어떠한 통계적 유의미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주거 인식의 경우, 주거 인식에 대한 효과는 종속변수의 어떠한 유형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즉, 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할수록 그것이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다.

표 III-14 집단 간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회귀 분석 비교(정규직 vs 비정규직)

구분		간접참여		직접참여		총참여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탈물질주의		0.074** (3.009)	0.022 (0.565)	0.062* (2.400)	0.021 (0.494)	0.069** (3.057)	0.022 (0.598)
교육인식		0.101** (3.537)	0.042 (0.887)	0.109** (3.604)	-0.023 (-0.458)	0.104** (3.952)	0.016 (0.368)
주거인식		0.019 (0.533)	0.099 (1.575)	-0.018 (-0.497)	0.091 (1.356)	0.004 (0.118)	0.096 (1.658)
기성세대 인식		0.140** (3.267)	0.038 (0.588)	0.160** (3.525)	0.052 (0.749)	0.148** (3.741)	0.044 (0.732)
정치효능감		0.409** (10.977)	0.530** (8.978)	0.294** (7.438)	0.460** (7.346)	0.363** (10.544)	0.502** (9.274)
정신건강		0.026 (1.006)	-0.036 (-0.927)	0.041 (1.523)	-0.035 (-0.859)	0.032 (1.353)	-0.035 (-1.004)
더미 변수	경기/인천	0.298** (3.903)	-0.064 (-0.485)	0.139 (1.718)	0.024 (0.171)	0.235** (3.323)	-0.029 (-0.238)
	대전/충청/세종/강원	0.189* (2.212)	-0.071 (-0.515)	-0.014 (-0.150)	0.180 (1.229)	0.108 (1.367)	0.029 (0.232)
	광주/전라/제주	0.803** (8.382)	0.449** (3.196)	0.489** (4.811)	0.360* (2.416)	0.678** (7.652)	0.414** (3.209)
	부산/울산/경남	0.466** (5.528)	0.417* (2.589)	0.048 (0.537)	0.112 (0.654)	0.299** (3.836)	0.295* (1.997)
	대구/경북	0.592** (6.377)	-0.026 (-0.179)	0.147 (1.488)	-0.210 (-1.344)	0.414** (4.824)	-0.100 (-0.739)
	여자	0.190** (3.634)	0.309**	-0.023 (-0.415)	0.058 (0.645)	0.105* (2.169)	0.209** (2.678)
Durbin-Watson		1.757	1.764	1.721	1.961	1.705	1.843
R^2		0.208	0.267	0.112	0.161	0.190	0.254
Adjusted R^2		0.199	0.244	0.101	0.135	0.180	0.231
F		22.334	11.760	10.689	6.210	19.854	10.963

* 주: 1) 표 안의 수치는 회귀계수 값이며, 가로 안의 값은 t 값임.

2) * $p < .05$, ** $p < .01$.

기성세대에 대한 인식의 경우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보다는 정규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정규직 집단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할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의 경우,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가 거버넌스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정치효능감 경우, 정치효능감 변수는 집단에 상관없이, 그리고 모델에 상관없이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적 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거버넌스 활성화도 그 만큼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변수를 살펴보면, 정신건강 변수는 종속변수의 유형에 상관없이, 그리고 집단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응답자의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하거나 또는 좋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거버넌스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어렵다.

4. 결론

1) 연구결과의 종합

이 연구는 정부 정책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정책 수단에 주목하여,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이러한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들을 찾아보는 탐색적 연구였다.

최근 들어, 높은 청년 실업률, 청소년 비행 등 청(소)년 관련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 실업률의 지속적인 상승은 정부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내놓고 청년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예컨대, 일자리 위원회 마련을 통한 비전제시, 청년 채용에 따른 세제지원,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은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비해 현재 청(소)년 관련 사회문제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청(소)년과 관련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일선 현장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구현해 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의사를 정책형성 및 집행에 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장치(또는 자리)인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러한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청(소)년층의 인식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곧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 참여에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의 수준을 간접참여와 직접참여로 구분하고, 각각의 참여수준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집단별로 검증하였다.

여기서는 전술한 통계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집단별로 구분하여, 거버넌스 수준을 비교한 결과, 성별에 차이, 지역별 차이, 연령의 차이, 종사자 직위에 따라 거버넌스의 수준, 즉 참여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남자보다 여자의 거버넌스 활성화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보다는 광주/전라/제주와 같이 비교적 인구 수가 적은 곳에서 참여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연령대에 따른 참여의 차이도, 나이대가 어릴수록 참여의 수준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의 직위에 따라 참여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의 참여 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 연구가 제시한 거버넌스 활성화의 독립변수인 탈물질주의, 교육

및 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치효능감, 정신건강 변수들이 어떠한 통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다양한 모델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물질주의가 거버넌스 활성화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분석 모델에서 탈물질주의는 거버넌스 활성화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그 방향도 모두 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즉, 탈물질주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 단, 연령대별로 보면, 15~18세 집단의 경우, 탈물질주의가 거버넌스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력 미치고 있지 않았으므로, 집단별로 거버넌스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해당 집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체로 참여, 즉 거버넌스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집단별로 그 효과는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구조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통계적으로 거의 유의미 하지 않았다. 특히, 연령대에서, 30-39세에서 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간접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연령대별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이 거버넌스 활성화에 차별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체로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일부 모델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거버넌스 미치는 효과는 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대, 연령대별로 살펴본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에서, 10대, 20대 보다는 30대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으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가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결과는 10대 그리고 20대를 거쳐 다년간의 사회경험을 통해 기성세대의 잘못된

행태와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참여의식, 즉 거버넌스 활성화의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정치적 효능감은 집단에 상관없이, 또한 참여의 유형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자가 정치를 바꿀 수 있으며, 자신이 그러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문의 유형에 관계없이 정치적 효능감이 조직의 문화, 사회의 문제, 정책의 성과 등을 개선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경향을 대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 경우, 응답자의 정신건강의 상태가 양호할수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전제로 거버넌스 활성화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대부분의 모델에서 그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못했다. 단, 일부 모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나 그 계수의 방향은 오히려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정신건강의 상태가 양호할수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2) 정책제언

그 동안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과 별개로, 실제 이들의 고민들을 들어보고, 또한 이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들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청(소)년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들이 정책집행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거버넌스 장치들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작동되지 않으며,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거버넌스가 시민 참여 혹은 주민 참여 등과 같은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또는 중심으로)하는 거버넌스 활성화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그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방향은 거버넌스 설계와 관련된 것으로 직접참여 형태의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간접참여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거버넌스의 구성과 형식은 직접적인 참여에 기반을 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버넌스 형태의 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능력,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로 인해 거버넌스의 운영이 일부 소수의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운영의 과정도 심도 있는 대화 및 토론 보다는 정부가 제시한 내용에 대한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등의 형식적인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의 참여기구를 제도화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초기에 이러한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적받아 왔었던 비판은 첫째, 참여하는 주민들이 과연 전체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 둘째, 특정 단체 혹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참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주민의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이 부족함으로 인해 참여 수준이 저조하다는 것 등이었다. 물론 현재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공사례가 나타나기는 하나, 여전히 이러한 사항들이 거버넌스 운영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거버넌스 형태의 운영이 청(소)년들의 참여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할 경우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거버넌스 수준, 이른바 참여의 수준을 간접참여와 직접참여로 구분할 경우, 집단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간접참여의 수준이 직접참여의 수준에 비해 평균적으로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집회 및 전화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전제로 하는 거버넌스 형태 보다는 인터넷 댓글 달기, 패치 부착을 통한 항의 표시와 같은 간접적인 참여 거버넌스 형태에 대한 선호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접참여 혹은 오프라인 형태의 참여와 같은 기존의 방식으로 해오던 거버넌스 운영으로는 청(소)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접참여를 전제로 하는 혹은 폐쇄적인 형태의 거버넌스 형태의 운영 뿐만 아니라, 간접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혹은 개방적인 형태의 거버넌스 형태의 운영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두 번째 방향은 사회 제도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청(소)년층 불만이 거버넌스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경우, 사회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은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갈등 분야의 연구들은 이러한 불만이 오히려 사회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청(소)년층의 불만의 높다는 것이 단지 정부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들이 정부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술한 분석결과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청(소)년층의 불만은 거버넌스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세 번째 방향은 거버넌스 활성화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행위자들에 주목하는 것으로, 탈물질주의, 정치적 효능감 등 거버넌스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배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건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시민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은 법 혹은 제도적으로 그러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 참여행정 등은 이러한 방식의 구체적인 형태였으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거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형식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형태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탈물질주의, 정치적 효능감과 같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배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대상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술한 분석결과에 제시되어 있듯이, 탈물질주의, 정치적 효능감 등의 변수는 거버넌스의 직접참여와 간접참여, 그리고 총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들이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은 청(소)층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미 이러한 요인들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 연구들에서도 중요한 변수였다. 단, 청(소)년층이 미래 세대의 주역이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세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배양할 경우, 참여라는 것을 하나의 습관처럼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이 그 이후 세대에 그러한 성향을 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일선 교육 및 훈련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구인회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구자경 (2004).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학교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2), 217-239.
- 국민의제 (2016.5.20). 우리나라에는 ‘청년정책’이 없다. 허프포스트 웹사이트 https://www.huffingtonpost.kr/korean-agenda/story_b_10049414.htm에서 2018년 8월 20일 인출.
- 권구영, 이해자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6), 59-86.
- 권혁주 (2007). 정책집행과 정책책임성: 거버넌스적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 **국정관리연구**, 2(1), 59-78.
- 권혁진, 유호선 (2011). 청년층의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특성: 성, 학력별 이행 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1-31.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광웅, 방은령 (2001). **한국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형성요인**. 서울 : 집문당.
- 김기현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KLI 워킹페이퍼**, 2017(8).
- 김기현, 방하남 (2005).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 격차. **한국**

- 사회학, 39(5), 119-151.
-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 (2017). **청년 사회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 기초분석 보고서**(연구보고 17-R09-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명숙 (2005). 로컬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3), 325-347.
- 김민정, 조금호 (2009).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 성숙도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47-62.
- 김민혜, 이승중 (2017). 정부성과와 시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부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2), 29-54.
- 김석준, 이선우, 문병기, 곽진영 (2000). **뉴 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 김성남, 최수정 (2012). 청년기의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화: 고교제열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1(3), 277-299.
- 김성식 (2008). 학생 배경에 따른 대학진학 기회의 차이: 성별, 가정배경, 지역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2), 27-47.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 김육, 이이범 (2006). 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 김위정, 김양분 (2013). 대학진학에 대한 가정배경의 누적적 매개 효과 분석. **한국사회학**, 47(4), 263-302.
- 김종욱 (2012). 로컬 거버넌스에서의 시민 참여와 정치적 평등성, 정치적 효능감: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2), 137-160.
- 김태완, 김문길, 정진욱, 강성호, 윤상용, 이주미, 정희선 (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연구보고서 2012-29).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정 (2009). 시민 참여의 표준사회경제이론 수정모형의 수립 및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8(3), 283-310.
- 김혜정 (2012).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6(2),

213-240.

김형준 (2004).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치의 신장과 한계. **의정연구**, 17, 57-91.
남정자, 조맹제, 최은진 (1996). **한국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보고서 96-29).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재량, 이철인, 전영준, 우석진 (2011).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1-04).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매일경제 (2015.5.31.). “정권 세 번 바뀌어도 청년실업대책은 봉어빵.. 실업자 5만 늘어”. 매일경제 웹사이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21680>에서 2018년 8월 12일 인출.

머니투데이 (2018.7.18.). “최저임금 인상 여파, 이제 청년들도 피부로 체감”. 머니투데이 웹사이트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711547497132>에서 2018년 8월 12일 인출.

모경환, 김명정, 송성민 (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42(1), 77-101.

문성호 (2006). 정책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 확대방안의 모색. **청소년학연구**, 13(6), 201-219.

문혜진, 변금선, 구인회 (2015). **대학진학에서 가족소득 역할의 변화에 관한 연구**. 1-17차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민소영, 이영순 (2014). 지역사회 환경이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비판사회정책**, 43, 207-235.

박미희, 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박성재, 반정호 (2012). 청년 취업자의 저임금근로 진입과 탈출에 관한 연구: 노동이동의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8(1), 163-190.

박순애, 박재현 (2010).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투표행태: 관악구 보육시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321-344

- 박재홍, 강수택 (2012). 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 **한국사회학**, 46(4), 69-95.
- 박진희, 김용현 (2010). **경제활동 및 직업이력 유형별 경력개발경로 분석: 경력초기를 중심으로**(연구자료 2010-12).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박찬욱 (1995). 한국인의 정치의식과 가치정향: 1995년 세연 국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가치전략**, 1(2), 81-115.
- 박찬욱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4(1), 147-193.
- 박희봉 (2006). 시민 참여와 로컬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1-23.
- 박희봉, 김명환 (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175-196.
- 박희봉, 이희창 (2006). 세대별 정치 이데올로기 차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1), 125-150.
- 방하남, 김기현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4), 31-65.
- 백승주, 금현섭 (2013). 불평등의 다차원적 접근-정 및 활용. **한국정책학회보**, 22(2), 283-312.
- 변금선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변길섭 (2014). 청소년 시민 참여활동과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시민청소년학연구**, 5(2), 1-46.
- 서봉언, 김경식 (2016). 한국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6, 91-115.
- 신동준 (2013). 대학생의 재학 중 일자리 특성과 학업 성과. **The HRD Review**, 16(5), 175-191.
- 안명규, 류정호 (2007). 인터넷 정치 참여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이버 커뮤니**

- 케어선 학보**, 23, 113-148.
- 우문식 (2012). 행복의 관점과 인구 통계적 차이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연구**, 28, 51-72.
- 우해봉 (2012). 한국인의 재혼 패턴에서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4), 273-303.
- 유민이 (2017). 시민의 정책참여 영향요인 분석: 온라인 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1(2), 129-159.
- 유민이, 문상호, 이숙종 (2012). 사회자본의 정부성과인식에 대한 영향: 시민 참여의 매개효과에 대한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4), 111-145.
- 유재원 (2003). 시민 참여의 확대방안: 참여민주주의 시각에서. **한국정책과학학보**, 7(2), 105-125.
- 유재원 (2004). 한국도시의 정치사회문화의 특징적 측면. **한국행정연구**, 13(2), 89-117.
- 이나경 (2018).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321-339.
- 이명숙 (2015). 청년 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건강, 사회적지지, 삶의 기대요인의 상대적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7), 179-199.
-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실태**(연구보고 10-R18-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이선희, 정복례, 김순희 (2015).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9(1), 115-126.
-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365-405.

- 이승은, 김태중 (2012). 저소득층의 대학진학 제약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35(3), 51-81.
- 이승중 (2001). 지방정치에서의 참여불평등-현실과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35(1), 327-343.
- 이승중 (2003). **민주정치와 시민 참여**. 서울: 삼영.
- 이승중 (2006) 거버넌스와 시민 참여. **국정관리연구**, 1(1): 64-82.
- 이승중, 김혜정 (2011). **시민 참여론**. 서울: 박영사.
- 이양수 (2006). 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형태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연구**, 10(3), 25-43.
- 이윤주 (2017). 지역사회 청소년 정치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시민역량 활성화 방안: 금천구 청소년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0(3), 149-177.
- 이윤주, 김기현, 하형석 (2017).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구**(연구보고 17-R3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아, 한창근 (2015). 저축이 청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2(4), 75-100.
- 이창호, 정의철 (2008). 촛불문화제에 나타난 청소년의 사회 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 **인론과학연구**, 8(3), 457-491.
- 이창호, 모상현 (2012). 청소년의 정치,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탈물질주의가치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143-164.
- 임준형 (2006). 도시전자정부가 시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3), 53-76,
- 장상수 (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한국사회학**, 34(3), 671-708.
- 정준호, 전병유 (2016). 다중격차지수와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 **동향과 전망**, 97, 45-80.
- 정해식, 김성아 (2015). OECD BLI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75-88.

- 정해식, 김수완, 안상훈 (2014). 다차원적 불평등의 세대간 특성: 현 노인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 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3, 337-369.
- 조금주 (2017).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청소년학연구**, 24(1), 355-376.
- 조진우, 이윤주 (2017).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블루노트 이슈 & 정책**, 81.
- 최성욱 (2003). 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각에서 비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0(0): 111-125.
- 통계청 (2017). **국민 삶의 질 2017**.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하동석 (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서울: 새정보미디어.
- 한성민, 이숙종 (2018).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1), 60-85.
- 한승헌, 임다혜, 강민아 (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 (precariousness) 과 행복. **한국사회정책**, 24(2), 87-126.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7.11.24). **청년의 목소리가 새로운 청년정책을 만든다: 청년소통 플랫폼 청년1번가 오픈**.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08&nttId=60663에서 2018년 8월 24일 인출.
- 황규성 (2016). 다중격차 : 다차원적 불평등에 관한 개념화 시론. **동향과 전망**, 9-44.

- Almond, G. A., & Verba, S.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an analytic Study*.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grist, J. D., & Pischke, J. S. (2008).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An empiricist's compani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lch, G. I. (1974). Multiple indicators in survey research: The concept "sense of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Methodology*, 1(2), 1-43.
- Beeghley, L. (1986). social clas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 review and an explanation. *Sociological Forum*, 1(3), 496-513.
- Benito, B., & Bastida, F. (2009). Budget transparency, fiscal performance, and political turnout: An approa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9(3), 403-417.
- Box, R. C. (1998). *citizen governance: leading american communities into the 21st century*. LD: Sage.
- Brady, H. E. (2004). An analytical perspective on participatory inequality and income inequality. *Social inequality*, 667-702.
- Brady, H. E., Verba, S., & Kay L. S. (1995).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271-294.
- Brehm, J., & Rahn, W.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 Cantijoch, M., & Martin, J. S. (2009). Postmaterialism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Spain. *South European Society and Politics*, 14(2), 167-190.

- Campbell, A., Gerald G., & Warren E. M. (1954). *The voter decides*. Survey of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 Costa, P. T., & McCrae, R. 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4), 668.
- Creighton, J. L. (2005). *The public participation handbook: Making better decisions through citizen involvement*. SF: Jossey-Bass A Wiley Imprint.
- Dahl, R.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 Dahl, R. (1998). *On democracy*.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 Dalton, R. J. (2008). *The good citizen: How a younger generation is reshaping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CQ Pres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
- Electoral Commission (2004). *Gender and political participation: defining and measuring political participation. Report*. LD: Electoral Commission.
- Elkin, S. L., & Soltan, K. (1999). *Citizen competence and democratic institutions*. PV: Penn State Press.
- Erickson, B., & Nosanchuck, T. A. (1990). How an apolitical association politicizes.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27(2), 206-219.
- European Commission (2015). *EU YOUTH REPORT 2015*. European Commission.
- Furstenberg, F. F., Rumbaut, R. G., & Settersten, R. A. (2005). On the

- frontier of adulthood: emerging themes and new directions. C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oghe, L., & Marks, G. (2001). *Multi-level governance and European integration*.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Huckfeldt, R. R. (1979). Political participation and neighborhood social contex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23(3), 579-592.
- Inglehart, R.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997-1017.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nes, B. D., Greenberg, S. R., Kaufman, C., & Joseph, D. (1977). Bureaucratic response to citizen-initiated contacts: Environmental enforcement in Detroi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148-165.
- Kaase, M. (1999). Interpersonal trust, political trust and non-institutionalis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22(3), 1-21.
- Kooiman, J. (2000). *Societal governance: level, modes, and orders of social-political interaction*. in Pierre, J.(eds), *Debating governance*. LD: Oxford University Press.
- Loeb, P. R. (1999). *Soul of a citizen*. NY: St. Martin's Griffin.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
- Milbraith, L. W., & Goel, M. 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2nd Edition)*. CH: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Muller, E. N., Jukam, T. O., & Selligson, M. A. (1982). Diffuse political support and anti-system political behavior: A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 240-264.
- Newton, K. (199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Norris, P. (Ed.). (1999).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LD: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 (2001).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policy-making*. Paris: OECD.
- Olsen, M. (1972). Social participation and voting turnou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3), 317-333.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Pierre, J. (2000). *Debating governance: Authority, steering, and democracy*. LD: Oxford University Press.
- Rapkin, B. D., & Schwartz, C. E. (2004). Toward a theoretical model of quality-of-life appraisal: Implications of findings from studies of response shift.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2(1), 14.
- Ravitch, D., & Viteritti, J. P. (2001). *Making good citiz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 Rhodes, R. A.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ersity press.
- Rosenstone, S. J., & Hansen, J. M. (200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Y: Longman.
- Roberts, N. C. (2008). *The age of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NY: M.E.

Sharp.

- Rogers, D., Barb, K., & Bultena, G. (1975).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n exploration of the mobilization hypothesis. *Sociological Quarterly* 16(3), 305-318.
- Ryff, C. D., & Heidrich, S. M. (1997). Experience and well-being: Explorations on domains of life and how they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2), 193-206.
- Schlozman, K. L., Burns, N., & Verba, S. (1994). Gender and the pathways to participation: The role of resources. *The Journal of Politics*, 56(4), 963-990.
- Sen A. (1980) Equality of What?. In McMurrin, S.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kocpol, T., & Fiorina, M. (1999).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s Press.
- Stoker, G. (1998).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1), 17-28.
- Sirianni, C., & Friedland, L. (2001). *Civic innovation in America: Community empowerment, public policy, and movement for civic renewal*.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mith, H. C. (1961). *Personality adjustment*. NY: McGraw-Hill.
- Stein, R., & Dillingham, G. (2004, September). *Political participation in an urbanized society*.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 September (pp. 2-6).
- Thomas, J. C. (1982). Citizen-initiated contacts with government agencies: A test of three theor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4-522.

- Tilly, C. (1998). *Durable inequalit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Verba, S., & Nie, H. N.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LD: Harper & Row.
- Verba, S., Nie, N. H., & Kim, J. O. (1987).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erba, S., Schlozman, K. L., & Brady, H. E.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 Vigoda-Gadot, E., & Kapun, D. (2005). Perceptions of politics and perceived performance in public and private organisations: a test of one model across two sectors. *Policy & Politics*, 33(2), 251-276.
- Wolfinger, N. H., & Wolfinger, R. E. (2008). Family structure and voter turnout. *Social Forces*, 86(4), 1513-1528.
- Yeich, S., & Levine, R. (1994). Political efficacy: Enhancing the construct and its relationship to mobilization of peopl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3), 259-271.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8-R01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이경상 · 이창호 · 김민
-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 · 백해정 · 김은정
- 18-R02-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희진 · 백해정
-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 최정원 · 강경균 · 강소영 · 김혁
- 18-R04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황여정 · 김승경
- 18-R05 20대 청년 심리 · 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윤주
- 18-R06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김형주 · 임지연 · 유설희
- 18-R06-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 · 임지연 · 유설희
- 18-R06-2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 · 임지연 · 유설희
-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 임희진 · 문호영 · 정정호
- 18-R07-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지연 · 이유진 · 정소연 · 박선영
- 18-R08-1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 정은주 · 김정숙
-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 · 청소년 · 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최용환 · 성윤숙 · 박상현
-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18-R12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최창욱 · 황세영 · 유민상 · 이민희 · 김진호
- 18-R12-1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황세영 · 유민상
- 18-R13 한국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IX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이종원 · 정은진 · 김성은 · 한지형
- 18-R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황진구 · 연보라 · 정윤미
- 18-R14-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 양계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모상현·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 장근영 (자체번호 1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김태준·홍영란·김미란·김홍민 (자체번호 1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모델 개발연구Ⅰ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이동훈 (자체번호 18-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
조아미·임장아·이지연·김남은 (자체번호 18-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자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김기현·배상률·성재민 (자체번호 18-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자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자체번호 18-R17-1)

수 시 과 제

-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김정숙·연보라
- 18-R19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송태진
- 18-R20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희진
- 18-R2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이경상·김승혜
- 18-R22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유민상
- 18-R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최창욱·김기현·김민규
- 18-R24 청소년 통일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이창호
- 18-R25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이창호

수 탁 과 제

- 18-R2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성과분석 / 김이성·오해섭·윤철경·정윤미
- 18-R27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모상현·정은주·이유진
- 18-R2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서정아·박선영
- 18-R29 제3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연·백혜정
- 18-R3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8-R31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1-1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이경상·임지연
- 18-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 김희진·황진구·임희진·정윤미·정선옥
- 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장근영
-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8-R37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현·김태성
-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오해섭·백승주·성지은·강지원·탁현우
-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3 아동·청소년의 걱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현·이윤주·최정원·유설희
-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현·하형석·유민상·조성호
-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문호영

-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 · 황여정
-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 · 한지형
-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락(중등용) / 황세영 · 한지형
-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 · 정제영
-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 I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 · 오해섭 · 윤철경 · 임하린 · 윤혜지
-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 · 서보람 · 윤철경 · 양수빈 · 이지혜
-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 · 박상진 · 하태욱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1/22)
-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 · 청소년 · 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 (2/28)
-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4/20)
-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 · 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5/25)
-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6/15)

-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 (6/15)
-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요?
(7/18)
-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 (11/19)
-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
-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
-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IS 2016)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연구보고 18-R06-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인 쇄 2018년 12월 23일

발 행 2018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빗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94-3 94330

979-11-5654-192-9 (세트)



연구보고 18-R06-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1943
ISBN 979-11-5654-194-3
ISBN 979-11-5654-192-9 (세트)